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19. 1

경 찰 청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경찰개혁·정부혁신 과제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국정운영 뒷받침

○ 그간 경찰개혁의 지향점으로 제시되어 온 「민주·민생·인권경찰로의
대도약」을 올 한 해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 △ 함께하는 민주경찰 △ 믿음직한 민생경찰 △ 따뜻한 인권경찰로
추진전략을 구체화, 개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조직역량 결집

○ 효과적인 경찰개혁·정부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장치 마련

▶ (인권경찰 구현) 「인권수준 향상도*」 신설, 관서평가에 10% 반영

* △ 인권위 권고 수용도 △ 인권교육이수율 △ 인권 우수사례 평가

▶ (집회시위 보장) 채증 판독률 삭제 및 집회시위 보장 노력도 신설

▶ (감찰행정 개선) △ 주요비위 발생률 △ 부패비리 적발 지표 폐지 → 공감받는
감찰활동으로서 소청 기각률과 예방감찰 노력도 등 평가

※ 성인지적 관점은 직무만족도 평가(관서장 10%)에 도입 예정

▶ (가점항목 신설) 경찰개혁 과제(△ 수사구조 개혁 △ 자치경찰 등)의 추진역량 결집을
위해 경찰개혁 지원 노력에 대한 가점항목 신설

※ 본청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위원회 구성(관련 기능 과장 참여) → 대상자 선정
(해당기능 추천) → 개인평가 원점수에 1점 이내의 가점 반영

○ △ 정부 100대 국정과제(경찰청 소관 2개) △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 일자리 창출 과제 등과 연계하여 경찰청 관리과제 설계

－ 관리과제 49개 중 1개(항공과)과제를 제외한 48개가 국정과제 등과 연계

○ 자체평가(관리과제)와 경찰청 내부 평가인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상호 연계하여 일원화된 평가체계 구축

－ 부서평가에 50%·개인평가에 25~50% 반영하여 추진동력 확보

※ 직위별 개인평가 시 부서평가 반영 비율 : 과장 100%, 계장 60%, 일반 50%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절차 운영을 통한 수용성 제고

○ 관리과제 설계과정에 있어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및 반영

- (외부) 외부전문가 ‘동행 컨설팅제’ 운영, 지표설계 단계부터
초 과정에 걸쳐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표관리

※ 성과평가위원회 분과별 서면·대면컨설팅(3. 26.~4. 3.) → 중간점검(7. 2.~31.)
→ 치안현장 방문(10. 18.~19) → 최종평가(11월)

➡ 부적절한 관리과제 수정(25개), 지표 목표치 적극적 재설계 (11개), 지표별 가중치 및 평가산식 조정(3)

- (내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의 미비점 및 문제점을
발굴, 이를 보완·개선하여 과제(지표) 설계 시 반영

※ 현장 의견이 체계적으로 치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중
‘대내·외 의견수렴(6%)’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

‘18년 현장 의견수렴 현황

- <현장간담회> 6개 권역으로 구분, 전체 지방청·경찰서담당자 등 현장직원과의 간담회
실시(4.13~5.30.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경북·경기·강원·제주·교육기관 順)
- <설문조사·간담회> 2차례 설문조사(1차 - 6월 10,996명 / 2차 - 11월 11,034명)
및 성과관리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 실시
- <현장 大토론회> 각 과제별 문제점 발굴 및 자체평가 관리과제와 현장의 성과지표
연동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의(11. 2. 경찰교육원, 180여명 참석)

○ 주관적 평가로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정성지표의 경우 구체적 평가기준 등 사전 공지 및 최종결과 확정 前 결과 공개절차 운영

- 사전 채점표 공개 : 기능별 정성지표(20개) 평가 前 평가단 구성·항목별 평가
기준·배점 등을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피평가부서에 공지
- 사전 결과 공개 : 성과평가 예비공개(12월경) 前 별도 정성지표 결과 공개기간
운영 → 평가항목별 점수 공개 및 근거·이유 제시

※ 이를 통해 평가가 권한이 아닌 책임임을 각인시켜 공정한 평가를 도모

□ 종합적인 업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 성과지표 개선

< 평가항목 개선 >

-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의 비중 상향(15점 → 20점)
 - 부서의 정책목표, 핵심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대표성 있는 정책과제 선정 및 국정과제, 주요업무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유도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지표 신설(10점)
 - 성과 달성도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에서의 부서 노력도를 평가하여 적극적 업무추진 및 변수 발생에 대한 능동적인 극복 노력 평가
- 환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환류 노력도’ 신설(8점)
 - 기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환류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미흡과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 평가항목 개선 >

- 치안고객만족도(관서평가에 10%) 평가항목 중 노후관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설 분야 만족도의 가중치를 1/3로 하향 조정

現 분야별 만족도 산출체계	관련 내용
①업무처리 가중치 ②응대태도 가중치 ③서비스질 가중치 ④시설환경 가중치 요소만족도 (70%) ⑤전반적 만족도 (30%)	(점수산출) ▶ 평가자가 ①~⑤ 항목별로 점수 부여, 가중치를 반영한 요소만족도 계산 ▶ 요소만족도(70%)와 전반적 만족도(30%)를 합산하여 해당 분야 점수 산출 (개선 후) ④의 가중치를 1/3로 조정 → 요소만족도 계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경무관 부장 평가에 소속기관 점수를 반영(40%)
 - 기존 소속 지방청의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하더라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평가의 합리성 제고
- 지역경찰 평가단위를 ‘팀’에서 ‘지·파출소’로 변경, 합리성 제고
 - 신고처리 건수 등 치안수요가 동일함에도 평가등급이 상이하여 수용도가 저조하고 순찰팀간 협력을 저해한다는 현장의견 반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다변화를 통한 합리적 평가 실시

-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
 - '18년 신임위원 선임에 있어 여성위원 비율 대폭 확대(6명 中 5명)
 - ※ '17년 여성위원 4명(15%) → '18년 여성위원 9명(30%)으로 상향

<'18년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분야별 비율>

구 분		소 계	교 수	경영인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기 타
'18년	인원(명)	27	11	3	3	4	3	3
	비율(%)	100	41	11	11	15	11	11

※ 기타 위원(3) : 의사(2), 법무법인 고문(1)

□ 미흡·부진과제 집중관리로 환류제도의 실효성 확보

- 성과관리지원팀을 구성하여 미흡과제의 체계적 관리
 - 중간점검 및 본평가에서 분과별 하위과제를 미흡과제로 선정
 - 미흡과제 담당부서에서 보완계획을 작성,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위원이 조직·인력·외부요인 등에 대한 심층분석 후 개선 방안 제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조직·인력 개편 등에도 반영

< 성과관리지원팀 구성 및 역할 >

- ▶ 구성 : 성과관리계장(팀장) / 성과담당자(3명) / 외부전문가*
 - * 외부전문가는 자체평가위원 중 미흡과제 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정
- ▶ 역할 : 자체평가 운영 지원 및 미흡과제 심층분석 등 환류 관리

- 평가지표에 '정책 환류 노력도(8점)'를 신설, 부서의 능동적 참여유도
 - 전년도 본평가 및 중간점검 시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보완 등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과제관리 여부를 평가에 반영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정책과제 설계·추진·평가·환류 등 **쑤 과정**에 자체평가위원이 참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합리적 평가 유도
 - 인원(총 30명) : △ 외부위원(27명)은 교수·언론인·법조인 등 전문가
△ 내부위원(3명)은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구성
 - 성과과제 사전컨설팅(3월) → 전체회의(4월) → 중간점검(7월) → 치안현장컨설팅*(9월) → 최종평가(11월) 등 연간 최소 5회 실시
 - * 본청의 정책이 일선에 제대로 안착되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 분과위원회별 정책과제 사전 컨설팅, 이행상황 점검, 본평가, 이의제기 심사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평가단 구성> 폭넓은 내·외부 평가단을 구성, 평가의 공정성 확보
 - (외부 평가단) 자체평가 외부위원(27명)이 분과위원회별 정책과제를 관리·평가하여 **국민의 시각을 평가에 반영**
 - ※ 자체평가위원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3명)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외
 - (내부 평가단) 현장에서 과제를 직접 추진하는 경찰청 과·계장을 내부평가단(54명)으로 구성,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
 - ※ 평가자 소속부서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한 평가 유도
- <현장의견 반영> 치안정책의 수립·추진·환류 쑤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내·외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추진동력 확보
 - △ 국민대상 설문조사 △ 현장직원이 참여한 간담회·워크숍 등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공감대 형성
 - ※ 매년 체감안전도 조사, 성과지표 현장간담회를 통해 성과제도 미비점 개선·보안

□ 평가방법

- (중간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로 대면회의 통해 관리과제 추진사항 점검, 미흡부분에 대한 수정·보완('18. 7. 1. ~ 7. 31.)
- (최종 평가) 내·외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지표 설계의 적절성 △정책과제 수행 노력 △목표 달성도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분과위원회별 관대화 방지 및 성향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85) 및 표준편차(5) 보정 실시

<평가단 평가방법>

- 내부평가단(50%)
 - 본청 과·계장급으로 국·관별 4명씩(대변인실은 2명) 총 54명을 평가단지정
※ 평가자 소속 국·관의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능별 평가인원 일부조정 가능
 - 치안성과관리시스템(내부망)을 활용하여 실적확인 후 평가
- 외부평가단(50%)
 - 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27명을 분과별 평가단으로 지정
 - 과제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 및 실적보고서로 평가(대면평가)

※ 과제별 최종 점수는 외부평가단 50% + 내부평가단 50%로 반영

- (추가 평가) 최종평가 후 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추진 동력 및 관심도 저하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
- ➡ 정책과제 최종평가 결과는 부서(課)평가에 50% 반영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49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20)	1-1. 정책과제의 대표성 및 지표설계의 적정성
	1-2. 정책과제의 연계성
2. 정책추진 노력도(30)	2-1. 추진계획 준수 정도
	2-2.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2-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3. 목표달성도(30)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3-2. 정책 효과성
4. 정책 소통 및 환류(20)	4-1. 대내·외 의견수렴
	4-2.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4-3. 정책 환류 노력도

2. 평가결과

(1) 총 평

□ '18년도 총 51개 과 중 48개 과의 4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 매우우수 3개(6%), 우수 7개(14%), 다소 우수 8개(17%), 보통 15개(31%), 다소 미흡 7개(14%), 미흡 7개(14%), 부진 2개(4%)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치안정책 방향을 민생치안·경찰개혁으로 설정하여 조직역량을 결집 등 총 10개(20%) 과제로 평가됨
- 미흡이하 과제는 △유능하고 품격있는 감사로 공정·투명한 치안 행정확립 △경찰항공 역량강화를 통한 치안현장 헬기이용 활성화 등 평가결과 하위 9개(18%)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49개 관리과제의 122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88.5%

- 성과지표 122개 중 108개 지표는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17년과 비교하여 달성율이(92% → 88.5%) 약 3.5%p 감소하였으나, 이는 목표치 설정에 대한 적정성 강화가 원인으로 분석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 설계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치안현장 헬기지원율 △국유재산확보율 △만족도 조사결과 등 외생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2) 주요성과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등 10개 관리과제가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 과제는,

○ 주민참여 바탕의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강화’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치안참여 확산

- ▶ (경찰청·셉테드학회 공동 세미나) 4. 20. 범죄예방 분야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셉테드학회와 세미나 개최
- ▶ (경·학 실습학점제) 지방청·경찰서↔대학間 협의하여 경찰학과 실습교과 편성 22개 대학 634명 참여
- ▶ (시민경찰학교) 주민 범죄예방교육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소개, 총 104개(전년 대비 96%↑) 운영

－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특별방법활동 등 수요자 중심 예방정책 추진

- ▶ (설명절 특별치안) 2.5.~18. 특별치안 ⇒ 112중요범죄 6.1%↓, 교통사망 23.3%↓, 부상사고 44.4%↓
- ▶ (여름경찰관서) 7.1~8.31 피서지 78개소에 전종요원 970명 투입, 취약요소 점검 및 몰카 단속 등
- ▶ (추석명절 특별치안) 9.10.~26. 특별치안 ⇒ 112중요범죄 10.9%↓, 교통사망 35.8%↓, 부상사고 33.3%↓

○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구역 확대

－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행안부·국토부 등 협업 추진

- ▶ 행안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17개소 150억)’, 국토부 ‘뉴딜사업(2개소 103억)’ / 경찰 진단·분석결과 반영
- ▶ 경찰의 진단결과 취약지점에 개선미흡(637개소) 지자체는 ‘경찰청·권익위 공동 개선권고’ 추진
- ▶ CPTED요소 의무적용 대상 ‘단독·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10월 입법예고

○ 지역공동체 신뢰 제고를 위한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

－ △ 지방청 접수인력 보강 및 민원전담반 도입 △ 현장대응 훈련 강화 △ 기동순찰대 운영 효율화 등 다각적인 정책 시행

➡ 전년대비 5대 범죄 4.9% 감소, 112 중요범죄신고 15.4%(강도 79.6%, 절도 19.6%)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창출 견인

< 사람이 먼전인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지 줄이기> 과제는,

○ 다각적·종합적인交通安全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 정부합동交通安全대책 수립을 위한 ‘9개 부처 합동 TF’ 구성

※ 4개 핵심분야(①보행자 우선 ②교통약자 보호 ③안전관리 강화 ④안전문화 확산), 11개 중점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총 30개 세부과제 선정

-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음주운전 근절대책 등 **교통안전 제도 개선**
 -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로 확대(3.27.공포/9.28. 시행)
 - (음주운전 근절대책) 면허취소 기준을 삼진아웃에서 2번 취소로 강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통고처분) 신설(3.27. 공포/9.28. 시행)
- ➡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고 특히, 보행자(10.5%)·어린이(31.9%)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 치안정책 방향을 민생치안·경찰개혁으로 설정 조직역량 결집 > 과제는,

- 정책과제 성과창출을 위한 주요 치안정책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 주요업무계획 △ 성과평가·관리 계획 등 정책추진을 위한 핵심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목표와 실행과제 등을 명확히 설정

▶ 주요업무 계획(2.5) : 「민주·민생·인권」을 정책목표로 설정, 세부 추진과제 발굴
 ▶ 성과관리 계획(4.26) :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49개)** 및 **성과지표 선정**
 ▶ 소요정원(안)(4.20) : 치안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인력·조직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정책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주요 정책현안 추진현황 점검(차장 주재, 총15회)하는 한편,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기능간 협력방안 등을 도출
 - ※ △ 자치경찰제 도입 △ 인권경찰 구현 등 핵심과제는 TF 운영, 실행방안 마련
- 핵심 정책과제의 계획 수립·시행·평가의 단계별 추진사항을 점검·보완하고 미흡과제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방안 도출

○ 적극적인 대외협력으로 입법·예산 등 실질적인 추진 동력 확보

- △ 국회위원·보좌진 업무설명회 △ 당정협의회 時, 업무보고·정책설명자료 등을 제공하여 입법·예산 등 국회의 지원동력을 확보
-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정책과제 집중관리 △ 현장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추진한 결과, **체감안전도 역대 최고점** 달성

(3) 개선·보완 사항

□ ‘유능하고 품격있는 감사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등 9개 관리과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유능하고 품격있는 감사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 과제는,

- 조직 내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 노력 부족
- 정량적인 활동지표 외에 외부기관의 감사활동 평가결과 등 자체 감사활동의 종합적인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성과지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를 위한 사이버수사활동 강화 > 과제는,

- 사이버범죄의 75%를 차지하는 인터넷사기 검거율 하락이 전체 검거율 하락으로 직결되어 목표달성도가 저조하였으며,
-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단일 지표로 설정하여 사이버성폭력수사, 허위사실유포 대응 등 연간의 정책추진 노력이 지표와 연계 부족

< 뉴미디어 활용 등 국민과의 소통강화 > 과제는,

- 정책과제 지표설계의 적정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부족
 - 그간 SNS 친구 수를 꾸준히 확보하였으나 페이스북 탈퇴자로 인해 다른 계정의 친구 수 증가분이 상쇄될 것을 우려, 소극적 목표 설정
-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에 있어 평가기준 설정이 미흡
 - ‘공정정보도’ 실적으로 인정되는 기사내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보도매체별 영향력이 다름에도 인정·불인정 매체의 기준이 없음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매우우수
2	강절도·생활주변 폭력배 단속 및 피해회복 강화	보통
3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를 위한 사이버 수사 활동 강화	미흡
4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보장	다소미흡
5	노사분규 등 집단갈등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역량 강화	다소우수
6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 및 '안전정보' 역량 강화	다소우수
7	인권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정보경찰 시스템 개선	다소미흡
8	국민인권 중심 수사서비스 제공 및 수사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우수
9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다소우수
10	과학적 범죄 대응을 위한 효율적 범죄분석 등 지원	미흡
11	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 과학수사 역량 강화	우수
12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고품질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다소미흡
13	외국인범죄 예방활동 강화와 외사 역량 제고	보통
14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미흡
15	예방·협력 활동을 통한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 공간 확보	우수
16	성폭력 예방 및 적극적 검거활동 전개	다소우수
17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다소미흡
18	가정폭력 사건 대응 강화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다소미흡
19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보통
20	불법풍속영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미흡
21	운전대상별 맞춤형 관리로 교통안전 확보 및 대국민 편익 제고	다소우수
22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보통
23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매우우수
24	지능 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우수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25	외국인범죄 대응 강화 및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통한 외사사범 근절	우수
26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공고화	보통
27	현장중심 예방활동 및 대응역량 강화로 테러위협 불식	다소미흡
28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보안활동 기반조성 및 탈북민 보호·지원 활동 강화	다소미흡
29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	보통
30	사이버 상 안보위해요소 확산방지 및 현장 대응 역량 제고	보통
31	'성공적인 경호행사'와 '경호 역량 강화'	보통
32	외사정보 및 방첩·대테러 역량 강화로 국가안정 유지	미흡
33	민주적 통제를 통한 인권친화적 경찰상 구현	미흡
34	공감받는 감찰상 구현으로 감찰행정의 신뢰도 제고	보통
35	유능하고 품격있는 감사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부진
36	뉴미디어 활용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	미흡
37	치안 역량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 행정 지원	다소우수
38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다소우수
39	선제적 법규정비와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의 법집행력 강화	우수
40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보통
41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추진	보통
42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보통
43	과학치안 R&D 확대와 전화민원 신속 처리로 현장 대응역량 제고	다소우수
44	경찰 전산망 보호 및 정보화사업 지원 강화	보통
45	경찰항공 역량강화를 통한 치안현장 헬기이용 활성화	부진
46	치안정책 방향을 민생치안·경찰개혁으로 설정하여 조직역량을 결집	매우우수
47	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보통
48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전문가 양성	보통
49	내실있는 정책정보 생산으로 치안시책 고도화·국민안전 견인	우수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범죄예방진단팀 역량 제고 및 테마별(8회) 점검·개선, 범죄예방 협의체 재정비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인프라 강화
- 지역주민이 실제 불안해하고 순찰을 원하는 장소 434,486개소 수렴 후 순찰계획에 반영 ⇒ 56.9% 이행 등 수요자 중심 탄력순찰 전개
 - 치안수요·주민의견을 토대로 수요조사 거쳐 인구·면적·112신고·5대범죄 등 종합 평가, 15개소(신설 11, 승격 4) 신설도 추진
- 경찰 자체예산으로 골목길 방범시설 설치(4.8억원, 296개소), 부처협업 사업, 지자체 CPTED사업 등 공동체와 함께 위험지역 환경개선 추진
- 중앙일보와 범죄예방대상(大賞) 공동주최, 국토부와 건축법 시행령 개정(10월 입법예고) 협의 등 공동체의 참여저변 확산 노력 지속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공동체치안에 지역사회의 참여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나, 경찰·지자체가 아닌 민간기업·지역주민의 참여는 부족한 경향
- 공동체치안의 성패는 공동체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도에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탄력순찰·CPTED사업 등 홍보활동 강화도 필요
- 탄력순찰에 대한 현장의 업무부담·수용도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성과지표 목표달성이 둔화되는 모습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간기업·지역주민 등 공동체 諸 구성원 참여 확산 필요

- '19년 중앙(경찰청) 단위 협의기구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고, 협력단체 앱(App)을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봉사 활성화

○ 공동체구성원의 적극 참여층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

- '19년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에 앞서 홍보 수요조사를 선행하는 등 공동체치안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

○ 탄력순찰의 현장부담·수용도 문제 등으로 이행도 둔화 경향

- 탄력순찰 요청, 112신고 등을 감안해 순찰차량 내비게이션에 순찰 경로 안내하는 범죄분석시스템 개발 등 현장수용도·순찰효율성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 탄력순찰 이행도(56.9%) △ CPTED사업 노력도(754건) 등 성과지표 목표치 100% 달성 • 특히, 중간컨설팅 의견을 수렴, 작년에 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으로 측정하는 등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탄력순찰은 주민참여도 및 경찰의 정책반영 노력, CPTED 사업은 지자체와 협업도 등 공동체구성원 역할·특성을 감안해 지역공동체 참여 견인을 위한 노력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성과지표임 • 특히,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순찰요청이 많은 야간시간대에는 112신고도 가장 집중되기에, 효율적 인력운영과 순찰코스의 정밀 관리가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하며, CPTED사업은 지자체와 유기적 협업관계가 전제되는 만큼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지속적 노력을 확인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평가계획상 추진 일정'에 따라 기한 내 추진완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5대범죄 전년대비 4.9% 감소, 강도 79.6%, 절도 19.6% 등 112 중요범죄신고도 15.4% 감소 • 체감안전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72.9→73.1점), 역대 최고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 피해품 회수 △ 조폭 검거 △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등 3개 지표의 목표치를 모두 초과 달성
- 시기별 형사활동 및 강절도 집중검거, 조폭·데이트폭력·응급실 폭력 등 악성 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 － 4대범죄 발생은 2.6% 감소('17년 477,872건 → '18년 465,286건)하고, 높은 검거율을 유지(77.1%)하여 안정적 치안상황 유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과제 3개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초과달성 하였으나,
 - － 범인검거 등 단속결과에 치중하던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위험요소 제거·경미범죄자 공동체 복귀 등 보다 근본적인 강력범죄 방지대책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근본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예방적·회복적 경찰활동」 강화
 - － 소액 절도 등 생계형 경미사범은 즉결심판 청구 및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 재범방지 및 공동체 복귀 유도
- 실종사건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형사 적극적 역할 부여
 - － 강력범죄 수사경험 및 전문성 높고 동시 다수인원 투입 가능한 ‘형사’로 ‘실종수사 업무’ 이관 예정('19년 상반기 인사 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5.4%	- 강·절도 피해품 회수건수 목표치 49,303건에 대해 총 54,167건 회수하여 109.9% 초과달성 - 지방청 광역수사대 조폭 검거인원 목표치 1,365명에 대해 총 1,416명 검거하여 103.7% 초과달성 -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목표치 58.7%에 대해, '18년 검거율 60.6% 달성하여 103.2% 초과달성 ※ '18년 발생건수(178,531) : 살인 793, 강도 822, 절도 176,916 '18년 검거건수(108,185) : 살인 777, 강도 821, 절도 106,587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대표적인 형사업무인 ①살인·강도·절도 검거율, ②조폭 검거성과, ③피해품 회수건수를 선정, 최근 3년치 성과를 기반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적절성 인정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1년간 시기에 맞추어 빈틈없이 설정한 12개 과제를 모두 추진 일정 준수하여 수행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형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 △강력범죄 높은 검거율 유지, △4대범죄 발생 감소,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증가 등 높은 정책성과 창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시기별 치안상황을 고려한 집중 단속으로 수사활동 강화
 - 18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7. 23.~10. 30.) 실시, 총 26,767건 단속, 9,888명(구속 333명) 검거(전년 대비 14% 증가)

구분	계	사이버 금융범죄	해킹 등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사이버 도박
건수	26,767	542	210	25,106	54	855
인원(구속)	9,888(333)	687(28)	257(3)	7,769(228)	65	1,110(74)

-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8. 13.~11. 20.)전개, 사이버성폭력에 적극 대응
 - (단속결과)불법촬영·음란물 유포 등 총 3,847명 검거(구속 136)
 - (폐쇄·차단) 해외서버 기반 음란사이트 106개 단속·92개 폐쇄
※ DNS 차단방식 도입, 未단속 주요 음란사이트 150개 접속 차단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사이버선거사범 단속(1. 22 ~ 6. 24.)
 - 총 3단계 대응체제 운영, 총 240건 389명 단속(총 선거사건 1,818건 2,665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평가결과

- 목표치의 적극성·성과달성도 평점 저조(평점 : 16.5점, 배점 : 20점)
- 전체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단일 지표로 설정, 82.0%를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 미달성으로 감점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실적치(달성도)
사이버범죄검거율(100%)	82.0%	75.0% (91.4%)

- 정책 효과성 항목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평점 13.8점, 배점 15점)

○ 문제점 분석

① 검거율 미달성

-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 11% 상승
※ 일선 署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사기(18.9%↑), 명예훼손(20.6%↑) 크게 증가
- '18년 주요 현안이었던 사이버성폭력, 허위사실유포에 총력 대응, 우수한 실적 거두었으나,
- 이로인한 현장업무 가중으로 사이버범죄의 75%를 차지하는 인터넷사기 검거율이 하락, 전체 검거율 하락으로 직결됨

② 지표 설정

- 전체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단일 지표로 설정하여, 사이버성폭력수사, 허위사실유포 대응 등 연간의 정책추진 노력이 지표와 연계되지 않음

③ 정책효과

- 과제목표인 사이버수사활동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단속·수사 성과 위주로 정책 효과 서술하였으나,
-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 효과 발생여부에 대한 서술이 부족했다는 지적 다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략적 성과지표 설정 및 집중 관리

- 피해자보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정책 추진 성과를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다양화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 각 계별로 성과지표 세분화, 지표별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집중 관리

○ 정책 계획·시행 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 수렴과 환류 강화 필요

- 단순 검거건수 외에 정책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5%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실적치(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사이버범죄검거율 (100%)</td><td>82.0%</td><td>75.0% (91.4%)</td></tr> </tbody> </table> 전체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단일 지표로 설정,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 목표 설정하였으나, 사이버치안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량 가중으로 미달성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실적치(달성도)	사이버범죄검거율 (100%)	82.0%	75.0% (91.4%)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실적치(달성도)						
사이버범죄검거율 (100%)	82.0%	75.0% (91.4%)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사이버범죄 검거율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검거건수) - KICS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 사이버 수사활동을 포괄적으로 대표 - 사이버범죄 단속활동을 수치화하여 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사기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이버테러까지 총 망라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활용,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예정된 추진계획 20개 모두 정상 추진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시기별 집중단속으로 주요 사이버범죄 검거활동 강화, 사이버질서 확립 ※ 사이버범죄 검거건수 : '17년 107,489건 → '18년 112,133건 -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 전방위 단속으로 가시적 성과 고양, 국민 불안감 해소 -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실시,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등 총 3,847명 검거(구속 136) - 사이버테러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 사이버안전 확보에 기여 - 전국 지방청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인력 확충 완비(25개팀, 126명), 모의훈련 시행을 통해 대규모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강화 - 방통위·방심위 등 유관기관 협업하여 피해 확산 차단 - 방심위와 협의,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요청 절차 개선, 수사 신속성 향상 - 민간분야 협업대상인 통신3사와 협조 통해 DNS차단방식 적용, 음란사이트 150여개 차단						

(1) 평가 결과

□ 주요성과

- '18년에는 절제된 공권력 사용을 통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시민의 인권·안전 확보라는 핵심 가치 달성을 위한 노력 전개
 - 불법성만을 부각했던 기존 성과지표인 '불법·폭력 시위 건 수'에서 탈피, 성과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3가지 신규 지표 도입

- ▶ (집회시위 1천 건당 배치된 경찰부대 수) 평화적 집회시위에는 진압부대 대신 교통·P/L 위주로 대응, 배치된 부대 수가 적을수록 성과 달성
- ▶ (집회시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묻는 문항에 대한 긍정 답변자 비율 평가
- ▶ (경찰 부상자 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안전한 경찰활동의 척도가 되는 경찰 부상자 수를 지표로 도입

- 전년 동기간 대비 배치부대 수(12.9%↓) 및 부상자 수(28.4%↓)가 모두 감소하였고, 여론조사 결과도 목표치인 긍정 답변자 비율 60% 이상(67.9%)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집회시위 배치 경찰부대 수' 지표에서 개별 집회시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전년 동기간 대비 배치부대 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2,058中)를 달성하지 못하였음(2,094中)

* 개별 집회시위마다 참가인원·장소적 위험성·참가자들의 불법 위험성 등 배치 부대 수를 결정하는 특성이 각기 상이하나, 이를 지표 계산식에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19년 성과지표 설정 시 개별 집회시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8.28%	• '대국민 여론조사' 및 '경찰 부상자 수' 지표는 모두 목표 달성 • '집회시위 1천건당 배치 부대 수'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해 전년 동기간 대비 배치 부대 수는 감소하였으나 일부 미달성(98.28% 달성) ※ 개별 집회시위마다 참가인원.장소적 위험성.참가자들의 불법 위험성 등 배치 부대 수를 결정하는 특성이 각기 상이하나, 이를 지표 계산식에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집회시위 1천 건당 배치된 경찰 부대 수 - 기존에는 불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부대를 과도하게 배치 하였으나 경찰부대 배치 최소화를 통해 절제된 경찰권 행사를 위한 노력 표현 • 집회시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객관적.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성과지표로서 수치화 • 경찰 부상자 수 - 그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강제조치(해산.검거 등) 시 참가자와의 마찰 및 경찰 부상자 발생 - 절제된 경찰력 사용을 통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불필요한 충돌 상황 방지, 경찰 부상자 수 감소 도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18년 계획한 15개의 과제를 모두 정상 추진하였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정책수혜자인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기조가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과 집단폭력, 손괴 등 불법 예방을 위해 직무교육, FTX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 특히, 각 지역별 현안 발생시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 등 불법 예방에 총력,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주최측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신고 단계에서부터 주최측과의 협의로 집회 보장·현장 대화경찰 배치, 안정적 집회 개최 등 치안부담 최소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평화적 집회 보장 등 정책의 원활한 수행으로, 집단갈등 현장 불법행위 최소화 및 대규모 집회시위 등 변수없이 대응
 - 다만, 최근 △OO노조 집단폭행 △관공서 등 시설 점거 △건설·화물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등 갈등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책 강화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17.12月)’이 마련됨에 따라, 집단갈등현장 불법행위 최소화를 위해 집단민원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상반기限) 및 직무교육(FTX) 강화 방안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 및 적정성	우수	지표 평균 점수 13.4점(배점 15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89.3)에 해당
2. 정책과제 연계성	우수	지표 평균 점수 4.6점(배점 5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92)에 해당
3. 추진계획 준수정도	우수	지표 평균 점수 4.7점(배점 5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94)에 해당
4. 정책과제 수행노력도	우수	지표 평균 점수 9.4점(배점 10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94)에 해당
5. 업무 추진과정 협업도	우수	지표 평균 점수 9.3점(배점 10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93)에 해당
6.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우수	지표 평균 점수 19.1점(배점 20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95.5)에 해당
7. 정책 효과성	우수	지표 평균 점수 13.5점(배점 15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90)에 해당
8. 대내외 의견수렴	우수	지표 평균 점수 5.8점(배점 6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96.6)에 해당
9.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지표 평균 점수 4.9점(배점 6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81.6)에 해당
10. 정책환류 노력	우수	지표 평균 점수 7.7점(배점 8점)으로 우수(백분율 환산시 96.3)에 해당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 증진 정도> 최근 5년간 전체 집회시위 건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불법폭력시위는 지속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 탄핵찬반 집회·민중총궐기 등 대규모 집회시위 때 마다, 교통마비 등 큰 불편이 야기되고, 경찰관 부상자 발생 보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데다, 평화 집회에 대한 기준은 점점 상향
 - ※'12년~'17년간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라는 응답은 평균 53.85%에 불과
 - 이에,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위의 불법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이를 위한 경찰 활동의 쏠 분야를 지표화 하고, 국민 여론 조사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계
- ⇒ 국민들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인식은 '17년 대비 '평화적'이라는 답변이 1.3% 증가(73.5→74.8%)하는 등 70% 중반에 안착하는 분위기이며, 세부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보장 노력도에 대해 68.1%가 긍정평가,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57.8%가 긍정평가,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과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에 58.8%가 응답하는 등 경찰 활동에 대해 과반수가 훨씬 넘는 평균 61.6%가 긍정적으로 평가
- <정책 효과> 전년 대비 집회시위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집회 참가 인원도 '17년에 이어 2년 연속 2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집회

시위가 활성화 되었으나, 경찰관 부상자 및 사법처리 인원이 크게 감소했으며, 1천명 이상 집회시 폭력시위도 3건으로 유지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조성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용 중임

구 분	전체 집회시위		1천명 이상 대규모 집회	1천명 이상 폭력시위	경찰관 부상자	1천명 이상 집회 경찰관 부상자	사법처리
	횟 수	참가인원					
'18.1 ~ 9월	48,874회	2,147,450명	294건	3건	74명	38명	355명
'17.1 ~ 9월	31,858회	2,489,864명	231건	3건	116명	80명	1,599명
전년대비(%)	17,076건↑	341,414명↓	63건↑	-	42명↓	42명↓	1,166명↓
	53%↑	13.8%↓	27.2%↑	-	36%↓	52.5%↓	73%↓

- <성과지표 이외의 정책효과> 대화경찰제 도입('18.8월) 이후 남녀 네티즌·퀴어·탄핵반발 등 찬반 단체가 마찰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대화경찰 필수 배치(총 78회), 불법행위 사전 예방효과는 물론 집회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

※ “대화로 품시다”...선진 시위문화 이끄는 ‘한국형 대화경찰관제’(한국경제, 10.12) 등 보도 / 여성네티즌(불편한 용기) 회원, “간이화장실 설치와 현장 안전확보 등 협조에 감사하다”는 반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국민 설문조사 관련, 집회시위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적극 참여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경찰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언론보도 태도인 만큼, 건강 부회하는 추측성 보도·논평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하반기 설문조사시에는 집회 참가·피해 등 경험자 참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집회시위 장소 인근 정류장·주택가·상가·사무실 등에서 면접원이 직접 현지에 진출하여 대면 조사, 지속 유지 필요
- 대규모 집회시위시마다 주요신문·방송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 등 관련 언론보도 현황을 꼼꼼히 모니터링, 보도 기조를 분석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각종 사회 갈등이 첨예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근 3년대비 가장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 △ 치밀한 계획 수립 △ 적극적인 정보공유 △ 내·외부 정책홍보 △ 지속적인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통해 목표치의 110%를 초과 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율(70%)</td><td>68.2점</td><td>115.8%(76.1점)</td></tr> <tr> <td>안전정보 분야 역량 강화율(30%)</td><td>80점</td><td>125.0%(100점)</td></tr> </tbody> </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율(70%)	68.2점	115.8%(76.1점)	안전정보 분야 역량 강화율(30%)	80점	125.0%(100점)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정착율(70%)	68.2점	115.8%(76.1점)									
안전정보 분야 역량 강화율(30%)	80점	125.0%(100점)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성과지표가 정책 목표와 부합하고, 핵심 업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임. 또한, 대국민 체감도를 지표화 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지표 설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美대통령 방한·평창 동계올림픽·사드 반발집회·여성네티즌·퀴어 찬반 등 대규모 전국적 이슈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부 계획의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정상 추진하는 등 목표한 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 • 특히,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국민 만족도도 지속 향상 된 것으로 확인,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한 지표 및 세부시행 계획임을 입증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평화적 준법 시위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 노력 전반을 성과지표로 반영하고, 국민 여론을 지표화하는 등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지표를 설계하였으며, 객관적 통계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1) 평가결과

□ 주요 성과

- 정보활동 시스템을 재구조화하여 집회시위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반 마련
 - － 경직법 개정, 정보경찰활동 규칙 제정 등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확충
 - － 신원조사 오류율 감소('17년 0.31%→'18년 0.01%)로 국민 기본권 침해요소 제거
- 정보경찰 시스템과 교육을 개편하여 현장 전문성 강화
 - － 전문제도 활성화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강화
 - － 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정보경찰 인권감수성 향상·국민신뢰 확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부서 업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하고, 일정에 따라 계획을 정상 이행하였으며, 성과지표 목표치도 110%이상 초과 달성
 - － 이와 아울러, 법제화부터 제도 개선까지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 다만, 정보업무의 기밀성·보안성 등으로 외부홍보 대상 발굴에 한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칙·법률 개정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대외 홍보에도 주력하고
 - － 간담회·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내부 홍보 강화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신원조사 오류율 및 인권친화 정보경찰 교육은 목표치보다 110%이상 초과 달성 / 견문수집 활성화 지표는 '견문 종합 점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3년간 추세에 따른 예상치 85.3점(2.9%↑)보다 높은 85.9점(3.6%↑)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활용견문 중 유가치성이 특히 높은 상보·중보의 비율이 전년도 보다 증가('17년 84.8%→86.4%)하는 등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인권친화적 정보경찰 양성교육(40%) - 정보경찰 정규교육 과정에 '인권교육' 강의 시간을 신설, 지표로 관리하여 정보관들이 헌법정신에 입각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원조사 오류율(40%) - 신원조사는 국가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또는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보수집 활동으로 신원조사 활동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엄중함을 반영하여 '신원조사 오류율'을 지표로 관리 • 견문수집 활성화(20%) - '견문실적이 근무평정에서 제외('15. 11월)'된 이후 지역경찰 등 비정보부서의 견문 제출 총량이 감소하여 경찰의 치안정보 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견문수집 활성화 지표를 설정 ※ 외부위원 컨설팅을 통해 지표의 대표성을 검증(과제·지표에 대한 특이의견 없음)받고, 관리과제와 지표간의 연계성을 보장 ⇒ 성과지표와 관리과제간 관련성이 매우 높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인권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정보경찰시스템 개선' 관련, 평가계획상 추진일정을 정상 이행 / 다만 규칙·법률개정은 '인권영향평가심사'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음 / 이밖에도 경찰개혁위의 정보경찰 개혁 권고, 영포빌딩 경찰문건 진상조사, 경찰 댓글조작 특별수사, 인권침해 진상조사 등 정보경찰 현안과 관련된 부가 업무도 충실히 수행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경직법 개정, 정보 경찰활동 규칙 제정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견문제도 활성화, 인권교육 확대 등으로 국민의 안전관 관련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신뢰 확보에도 기여 ※ 법제화부터 제도개선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тем들을 실현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달성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과제 중심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 수사구조개혁의 전제가 되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인권관련 개혁과제 13개 모두 시행 완료

- (피의자 인권보장) △심야조사 기준요건 강화, △조사과정에서 경찰
장구 사용시 기록 의무화, △송치前 자료·의견 제출기회 보장 등

- ▶ (심야조사 기준·요건 강화) 심야조사 금지원칙을 「범죄수사규칙」에 명문화('18.8월)
- ▶ (경찰장구 사용 기록) 조사과정에서 수갑·포승 등 사용 시 사용여부·시간 기재
- ▶ (수사절차 개선) △조사일정 사전협의 △송치前 자료·의견 제출 기회 보장
△압수·수색시 이견 제출 보장 등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시범운영('18.7~9월)

- (수사권 남용방지) '제척·기피·회피', '장기 인지수사 일몰제' 도입('18.1월)

- ▶ (제척·기피·회피제도) 제도시행 이후 '기피'(前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건수
23.6% 증가(1,395 → 1,724건), '회피' 19건 시행 등 안정적으로 정착
- ▶ (일몰제 미이행 비율) '18.2월 60.6% ⇒ 10월 36.3% (24.3%p↓)

- (변호인 참여 실질화) △조사 일시·장소 사전 협의 △변호인
조언·상담 보장 등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18.3월)

- ▶ (운영성과) '18.3~10월간 변호인 참여 횟수 전년동기간 대비 41.3%↑(7,344⇒9,642건)

-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등 수사전문가가
영장신청前 관련 요건을 심사하는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 ▶ (운영현황) '18.3월 8개서 시범운영 실시 → 8월 23개서로 시범운영 확대
- ▶ (운영성과) 시범운영서 영장발부율 상승(구속 15.0%p, 체포 3.5%p, 압수수색 5.7%p↑)
- ▶ (향후계획) '19년 상반기 본청·지방청 직접수사부서 등 확대 추진

- (영상녹화 등 확대) △ 피의자 녹화요청권 신설, △ 강도·마약·경제범죄(5억이상) 등 까지 영상녹화 의무 대상을 확대('18.3월)

▶ (영상녹화 건수) 제도 시행 이후 전년동기간 대비 4.2%↑ (29,717건⇒30,982건)

○ 국민 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환경 개선

- (조사환경 개선) △ 조사·사무공간 분리, △ 피해자 전용 조사실·대기실 설치, △ 통합수사당직실·호송차고 설치 등

▶ (추진상황) 우선 개선대상 164개 경찰서 중 28개署 완료, '18년 16개 개선 중

- (유치장 환경개선) △ 유치실 전면 쇠창살 제거, △ 밀폐형화장실 개선, △ 유치인의 동작을 인식하는 지능형CCTV 설치 등

▶ (추진상황) '13~'18년간 29개 유치장 개선 완료, '19년 4개 개선 예정 / '15~'18년간 유치장 내 모든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 완료('18년 251실)

○ 수사 신뢰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교육·인력 지원

- (수사지휘자 책임강화) △ 팀장의 실질적 지휘·통솔이 가능한 범위내로 팀원수 조정(소팀제*), △ 수사지휘결과 분석·환류 기능 강화, △ 수사지휘 역량 종합평가제도 도입 추진 등
- (보직관리 강화) 팀장자격제 강화 및 과장자격제 신설('18.8.7.)
- (수사경과제 강화) △ 수사경과 선발 및 갱신제도 강화 △ 年 2회 엄격한 해제심사 운용 등 수사업무 부적격자 적극 배제 추진
- (전문인력 채용 확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분야별 경력경쟁채용 확대('17년 158명⇒'18년 328명) 및 인사관리 강화
- (체계적인 수사교육 시스템 구축) 수사입문부터 관리자까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의 종합적 교육과정 설계·연구
- (전문수사관 확대) 최종·기법별 인증 분야(15개→88개) 및 선발 인원 대폭 확대('18년 681명의 전문수사관 신규 선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그간 시행한 각종 제도·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 필요
 - ⇒ 지속적인 현장점검,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완전한 현장 정착 유도
- 수사경찰 교육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기관과 세부적인 내용 등 협의 필요
 - ⇒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수사경찰 교육 개선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4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 초과달성 - 경찰개혁위 인권 관련 권고과제 이행율(임계치인 100% 달성) -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율 (목표치의 110.6% 초과달성) - 팀장자격제 준수율 (목표치 107% 초과달성) - 전문수사관 선발비율 (목표치 198% 초과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성과지표가 과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모든 일정을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완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 우수하며 정책 효과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상 최초 「수사권 조정 정부안」 전인
 - － 정책과제 확행을 통하여, 국민여론·학계 등 시민사회·정치권 및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우수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 －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가 발표한 ‘사상최초’ 「수사권 조정안」 전인
- 성공적인 대내외 홍보·교육 추진으로, 개혁역량 결집 달성
 - － 수사구조개혁 현 상황을 전파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화상회의·전국 실무자 간담회·각종자료 제작 등 기획·실행
 - － 특히, 수시로 특강 강사로 초청되어 특강을 진행하거나, 학회 토론자로 나아가 학계·정치권 등에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에 관한 경찰청 입장을 발표 및 홍보
-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 10건*이 계류 중이고, 사개특위에서 법제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 중

* 표창원, 금태섭, 이동섭, 오신환, 박범계, 심상정, 백혜련, 박범계, 박지원, 곽상도 의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활동 미흡
 - － 1회성·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활동방안 수립 필요
- 가시적인 성과 부족
 - － 수사구조개혁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제시되지 못한 한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내부망 폴넷에 개설한 수사구조개혁 전용 게시판인 「수사구조개혁 바로알기」를 전폭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소통창구로 활용
 - － 수혁단 활동상황·국회 등 논의진행 현황·국회의원 발언록·대외 홍보자료 등 게시
 - － 신속하고 적실성 있게 자료를 전파함으로써 직원들이 현장감 있게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내부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
 - 국회 사개특위 등 논의를 뒷받침하는 대내외 활동 체계화·고도화
 - － 수혁단 내부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확립하고 전종하게 함으로써 업무역량·효율 극대화
- ※ 수혁1팀은 검토자료 작성 / 수혁2팀은 대외 업무협의 / 제도팀은 대내 개혁방안 수립·시범운영
- 전략적·정책적으로 홍보활동을 다변화하여 홍보효과 제고 및 국민여론 결집 기대
 - － 라디오 방송 출연, 팜플렛 배포, 각종 특강 추진, 홍보동영상 SNS 게시 등
 - －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 관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모든 성과지표는 기한에 맞춰 초과달성되었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성과지표는 과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었고, •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구성함으로써 주요과제 및 지표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는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이 모두 충족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중복되거나 모순됨 없이 정책과제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연중 수사구조개혁 활동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여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국회·학계·시민사회의 지지를 견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정부의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안 개정 논의를 촉발하여, 현재 사개특위 등에서 원활하게 논의 진행 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과학적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사지원 체제 구축

- 살인·강도 등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을 통해 미제사건 수사지원 강화
※ '18년 1,107건 재검색, 98건/131명 검거(살인1, 강도1, 성폭력1, 절도128)
- 지문·수법 등 재분석 통한 연쇄·광역 범죄 인지, 여죄 입증 등 수사 지원
※ '18년 연쇄·광역성 의심 대상자 총 49명/263건 분석, 11명/85건 검거
- 광역(수도/충청권·영남권·호남권 등) 프로파일링 지원 체제 구축
※ '18년 광역 범죄분석회의 30회 실시, 충남 니코틴 살인사건 등 범죄분석 지원

○ 스마트 치안을 위한 과학수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고도화) 과학수사 업무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 체제 구축, 과학수사 진행상황 통합검색 및 과학수사 활동 문자알림 제공 등
-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고도화) 공간정보 시각화, SCAS·KICS·112데이터 통합 분석, 외국인 범죄 현황 분석 등 기능 개발
- (유동인구 빅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KT 유동인구 빅데이터 및 발생 사건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우범지역 도출, GeoPros에 반영

○ 과학수사 현장 인프라 구축

- (예산확보) △경찰 지문자료 고도화 사업(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선정) '19년 예산 18억원 확보(연차사업('19~'22년)으로 추진 예정, 총사업비 52억 원)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고도화 11.2억, △ 거짓말탐지검사실 시설
바·장비구입 7.3억 △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구입비 5.4억 등
- 용의자 위·변장에 대응하는 '최신 몽타주 시스템' 보급

- 수범범죄자의 얼굴을 3D로 촬영, 용의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3D 수범영상촬영장비’ 보급
- ‘동영상 축약 프로그램’ 보급,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거 지원
- 유가증권 등 위·변조된 문서를 신속하게 감정하는 ‘문서감정 장비’ 보급
- 현장에서 바로 지문을 입력·조회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라이브스캐너’ 보급 등

○ 범죄분석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현장만족도 대폭 향상

- 현장 중심의 과학수사 지원 활동으로 범죄분석 현장만족도가 전년 70.3점 대비 대폭 상승(8.8점, 12.5%↑)한 79.1점을 획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20점 만점 대비 17.78점 획득)

- 목표치를 ‘높음’ 수준으로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심사 의원들께서 적극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
- 목표치를 110% 이상 달성하여야 ‘초과달성’으로 만점을 획득할 수 있으나,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만점, 3개 항목이 100%~109%에 해당하여 ‘달성’으로 만점 보다 한단계 아래 점수를 획득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 목표치를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 목표치를 110% 이상 달성(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중심의 과학수사 지원활동(범죄분석, 현장지원, 지문감정)을 전개하며,
- 국민만족지수, 범죄분석현장만족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반영하겠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5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적극 설정하고 100% 이상 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실적치(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① 범죄분석지원지수(20%)</td><td>41</td><td>57.2점(139.5%)</td></tr> <tr> <td>② 현장지원지수(20%)</td><td>62.3</td><td>69.4(111.3%)</td></tr> <tr> <td>③ 현장지문신원확인율(20%)</td><td>59.1</td><td>60.7(102.7%)</td></tr> <tr> <td>④ 국민만족지수(20%,)</td><td>71.0</td><td>76.46점(107.7%)</td></tr> <tr> <td>⑤ 범죄분석 현장만족도(20%)</td><td>78.0</td><td>79.12(101.4%)</td></tr> </tbody> </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실적치(달성도)	① 범죄분석지원지수(20%)	41	57.2점(139.5%)	② 현장지원지수(20%)	62.3	69.4(111.3%)	③ 현장지문신원확인율(20%)	59.1	60.7(102.7%)	④ 국민만족지수(20%,)	71.0	76.46점(107.7%)	⑤ 범죄분석 현장만족도(20%)	78.0	79.12(101.4%)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실적치(달성도)																		
① 범죄분석지원지수(20%)	41	57.2점(139.5%)																		
② 현장지원지수(20%)	62.3	69.4(111.3%)																		
③ 현장지문신원확인율(20%)	59.1	60.7(102.7%)																		
④ 국민만족지수(20%,)	71.0	76.46점(107.7%)																		
⑤ 범죄분석 현장만족도(20%)	78.0	79.12(101.4%)																		
2. 성과지표의 적절성	94%	- 성과지표가 부서의 정책목표 및 핵심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책과제의 대표성과 적정성이 매우우수함 (평가의견) 정책과제에 대한 대표성 및 지표의 적절성 설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짐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3D얼굴인식시스템/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지리적프로파일링 시스템 고도화, 첨단 과학수사 장비 보급 등 22개 추진계획 모두 일정지연 없이 정상추진 완료 (평가의견) 추진일정을 모두 정상추진하였으므로 만점임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매우우수	- 전문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해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기여 - 폴리그래프 검사 절차 개선, 경찰 문서감정 분야 신설 등을 통해 업무절차 개선, 수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강화 -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지리적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치안활동의 기반 마련 - 특히 현장중심의 과학수사 지원 활동으로 범죄분석 현장만족도가 전년 70.3점 대비 대폭 상승(8.8점, 12.5% ↑)한 79.1점을 획득 (평가의견) 대체로 우수함, 업무 간소화 효과가 있어 보임 등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마트 치안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 국과수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2개소 구축 및 4개 지방청 과학수사과 신설 등 조직적 기반 마련
- 과학수사 전문인력 확보 및 첨단 기법·장비 보급·운영을 위한 '19년도 과학수사요원 총 66명 증원* 및 예산 330.5억원 확보**

* 기존 1,165명 대비 5.7%⬆ / ** 기존 270억원 대비 22.4%⬆

○ 과학수사요원 전문성 강화로 기법·장비 연구개발 등 첨단화

- 미량혈흔의 탐지를 위해 기존 제품 대비 성능·비용을 개선한 '루미놀 新 시약' 국유특허 등록, 아시아법과학네트워크 발표
- 지문을 신속·편리하게 채취하는 천연고무 기반 '지문랩핑키트' 직무개발, 경찰청 및 중앙부처 우수 공무원제안 대상(1위) 선정

○ 과학수사 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대국민 만족도 대폭 향상

- 국민의 관점에서 경찰 과학수사 활동을 재편하기 위해 '현장감식 책임실명제' 전면 시행, '토크 콘서트' 최초 개최 등 적극 추진
- '18년 하반기 과학수사 대국민 만족도는 76.46점으로, '17년 71.20점 대비 5.26점(7.4%⬆) 대폭 향상이라는 고무적 성과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적극적인 과학수사 대외홍보 활동 필요(내부 평가위원 1인)

-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대내·외 의견 수렴, 정책환류 등 노력에 비하면 언론 등 홍보활동이 다소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홍보, 국민참여 프로그램 등 적극 확대

- 신임 언론기자 등 대상으로 기법·장비 소개 및 체험 등 체험학교 개최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 이해도 제고 및 발전정책 적극 홍보
- 토크 콘서트, 대국민 공모전 등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발전적 제언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확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달성	• 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적극 설정하고 100% 이상 달성 <table><tr><th>성과지표 (비중)</th><th>목표치</th><th>실적치 (달성도)</th></tr><tr><td>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 과학수사 역량 강화 (100%)</td><td>100</td><td>101.6</td></tr><tr><td>현장임장지수(40%)</td><td>50.1%</td><td>50.5% (100.8%)</td></tr><tr><td>국민만족지수 (20%)</td><td>73.30점</td><td>76.46점 (104.3%)</td></tr><tr><td>증거채취지수 (40%)</td><td>1.90점</td><td>1.92점 (101.0%)</td></tr></table>	성과지표 (비중)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 과학수사 역량 강화 (100%)	100	101.6	현장임장지수(40%)	50.1%	50.5% (100.8%)	국민만족지수 (20%)	73.30점	76.46점 (104.3%)	증거채취지수 (40%)	1.90점	1.92점 (101.0%)
성과지표 (비중)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 과학수사 역량 강화 (100%)	100	101.6															
현장임장지수(40%)	50.1%	50.5% (100.8%)															
국민만족지수 (20%)	73.30점	76.46점 (104.3%)															
증거채취지수 (40%)	1.90점	1.92점 (101.0%)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매우우수	• 정책과제의 3대 주요전략을 대변하는 3개 성과지표로 구성 <table><tr><th>3대 주요전략</th><th>3개 성과지표</th></tr><tr><td>C-현장 맞춤형 (Customization to Field operation)</td><td>①-현장임장지수 (40%, 정량)</td></tr><tr><td>S-국민 공감형 (Sympathy with People)</td><td>②-국민만족지수 (20%, 정성)</td></tr><tr><td>I-전문역량 강화형 (Improvement in Expertise)</td><td>③-증거채취지수 (40%, 정량)</td></tr></table> • 성과지표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 추진계획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내실있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책과제 대표성과 적정성이 높음	3대 주요전략	3개 성과지표	C -현장 맞춤형 (Customization to Field operation)	①-현장임장지수 (40%, 정량)	S -국민 공감형 (Sympathy with People)	②-국민만족지수 (20%, 정성)	I -전문역량 강화형 (Improvement in Expertise)	③-증거채취지수 (40%, 정량)							
3대 주요전략	3개 성과지표																
C -현장 맞춤형 (Customization to Field operation)	①-현장임장지수 (40%, 정량)																
S -국민 공감형 (Sympathy with People)	②-국민만족지수 (20%, 정성)																
I -전문역량 강화형 (Improvement in Expertise)	③-증거채취지수 (40%, 정량)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현장감식 책임실명제 계획 수립, 문서감정 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등 정책과제의 18개 추진계획 모두 일정지연 없이 정상추진 완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매우우수	• 과학수사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장비 개발 - '미량혈흔 탐지용 루미놀 新 시약' 국유특허 등록, '천연고무 기반 지문랩핑키트' 중앙부처 우수 공무원제안 대상(1위) 선정 • 업무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대국민 만족도 대폭 향상 - '18년 하반기 경찰 과학수사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는 76.46점, '17년 71.20점 대비 5.26점(7.4%↑) 향상되는 고무적 성과 달성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증거분석건수가 전년 대비 9,043건(25.1%)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급증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일수 4일 단축
 - ※ 분석건수 증가(36,060건 → 45,103건), 평균처리일수 단축(15.8일 → 11.8일)
- 디지털포렌식 관련 신규개발(4건), 고도화(10건), 연구보고서(6건)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량적) 현장의견 수렴 부족, 대내 협력 부족
- (정성적) 대외 홍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의견 수렴 강화
 - 주요 정책 기안·시행, 프로그램 개발·배포 前 현장의견 적극 수렴
 - 현장의견 수렴 실적 정기 점검 및 정책반영 등 환류 실시
- 대내 협력 제고
 - '19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국정과제·추진방향과 연계된 정책 수립
 - 타 국·관 정책·시책 중 3C 가능한 사항 발굴하여 협업 추진
- 대외 홍보 노력
 - 내부심의제 등 대국민 관련 정책 추진 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학술지 발간·학술대회 개최 등 홍보사항 발생 시 내·외부망 공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증거분석 신속도 ⇒ 우수 - (과거 실적 및 추세) '15년 15.5일, '16년 16.9일, '17년 15.8일로 3년간 실적치가 하강 후 상승국면임 - (목표달성도) 목표치보다 2.5일 더 단축한 11.8일 달성하여 최종 달성도가 267%임 • 디지털포렌식 품질 고도화 ⇒ 우수 - (과거 실적 및 추세) 신규 지표이나 지표 관련 과거 활동 파악한 결과 '17년 8.6점임. - (목표달성도) 목표치 달성하여 최종 달성도가 100%임 • 디지털포렌식 도구 현장활용도 ⇒ 우수 - (과거 실적 및 추세) 신규 지표이나 지표 관련 과거 활동 파악한 결과 '17년 총22,435건(Pol-Hash(모바일) : 20,330건,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 2,105건)임 - (목표달성도) 목표치인 25,800건보다 5,323건 더 증가한 31,123건 달성하여 최종 달성도가 258%임 • 디지털포렌식 연구·개발 실적 ⇒ 우수 - (과거 실적 및 추세) '15년 10.8점, '16년 12점, '17년 14.6점으로 3년간 실적치가 연 16.3% 증가율로 상승 추세임 - (목표달성도) 목표치보다 0.4점 더 상승한 17.6점 달성하여 최종 달성도가 115%임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증거분석 신속도 - 신속한 증거분석결과 회신은 현장수사의 신속성 및 성패의 중요한 요소임 • 디지털포렌식 품질 고도화 - 디지털증거분석 인프라 강화, 분석기법 개발·공유, 분석업무 표준화 및 제도 개선 노력 필요 • 디지털포렌식도구 현장 활용도 - 무결성 등 증거능력 유지는 디지털포렌식 수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핵심요소임 • 디지털포렌식 연구·개발 실적 -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제고 노력 판단 가능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총 30개의 추진일정 중 기한을 정한 28개의 일정은 조기추진(6개) 또는 정상추진(22개)하였고 연중상시 실시하기로 한 2개의 일정도 총 11회 실시하는 등 모두 일정에 맞추어 충실하게 달성하였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매뉴얼 및 핸드북 제작·배포하여 현장 수사관들의 디지털포렌식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현장활용건수가 전년대비 38.7% 증가 •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증거분석건수의 급증(36,060건 → 45,103건)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일수 단축(15.8일 → 11.8일)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다문화 구성원에게 범죄예방교육 및 운전면허교실 등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사회 정착 지원 및 안전한 다문화치안 확보
 - 외국인 밀집지역 체감안전도 1.1점 상승, 다문화 치안활동 만족도 2.95점 상승, 외국인범죄 5.3% 감소
 -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치안분야 만족도 6년연속 1위
- 국정과제 「재외국민보호 역량강화」 관련 유관기관(국회·외교부·행안부)과 협의, 경찰주재관 증원 및 교육·홍보 등 전문성 강화 추진
 - ※ 국회(8회)·외교부(18회)·행안부(3회) 방문, 경찰주재관 증원 필요성 적극 설명
 - '18년부터 경찰주재관 교육을 4단계로 강화, 교육인원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26명→100명) 교육 저변 확대를 통한 역량강화 도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소통 및 환류를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제한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수렴
- ‘다문화 치안활동 활성화’지표 측정산식 가중치에 대한 근거 부족
- ‘해외파견자 활동지수’지표에 대한 정책효과성 측정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문화 치안활동 활성화’지표의 활동별 가중치를 실제 업무의 중요도 및 타 기능과의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 외사업무 관련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최대한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다문화 치안활동 활성화 평가'와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홍보 등 활동 지수' 모두 110% 이상 목표치를 초과달성 - 다문화 치안활동 활성화 평가 : 116.5% -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홍보 등 활동 지수 : 119.7%
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 외국인 범죄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외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지표로 구체화 - 범죄예방교실 등 다문화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지식 전달 및 소통창구 마련뿐 아니라 체류 외국인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치안 안정의 근간 형성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모든 과제를 평가계획상 추진 일정에 맞춰 기한 내 100% 완료 - 과제의 내용적 측면에서 다문화사회의 안정과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토록 충실히 구성 - 일정 준수 측면에서 단 한건의 지연사례 없이 모든 과제를 기한 내 정상 추진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다문화 정책 수혜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한 다문화 치안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17년 대비 2.95점 상승 • 전반적 체감안전도는 '17년 하반기 대비 '18년 상반기에 0.2점 하락한데 반해, 외국인 밀집지역 체감안전도는 1.1점 상승 • '18.1~10월 전국 외국인피의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5.3% 감소, 외국인 범죄 안정화 추세 유지 • 2018년 상반기 서울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전체 17개 항목 중 치안분야 만족도 6년 연속 1위를 기록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치안한류 확산) 외국 경찰기관에 한국경찰의 치안시스템을 전수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중미·아프리카·아시아 지역 국가로 확산

※ △중미3국('15~'18년, 1,350만불) △우간다('17~'19년, 5억), 전문가(14국 89명) △초청(22국 413명)

- 외국 경찰기관에 국내기업의 치안장비 수출 지원 절차 마련

※ '18.10월 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지원 협업시스템 구축

- (치안외교 강화) 적극적인 치안외교 활동을 통해 외국경찰기관과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남방정책 등 정부의 외교정책 지원

※ △청·차장 고위급 회담(33회) △치안협력 MOU 체결(1회) △치안협의회 운영(4개국)

▶필리핀: 1차 초청연수('17.11월, 청장 등 12명), 2차 초청연수('18.2월, 차장 등 10명)

▶베트남: 과수역량강화사업 추진('17~'19년, 60억), 경찰청 차장 과수센터 완공식 참석(9.20.)

▶인도네시아: 경찰청 차장 방문(5.22.), 사이버수사역량강화사업 추진('18~'21년, 510만불)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협력의 다변화) 그간 국제협력이 지역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국제기구 및 미주·유럽 등으로 확대 필요
- (효과성 제고) 재외국민보호, 치안장비 수출 등 국제협력 업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측정방법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평가의견

- ▶(위부위원) 국제협력관계가 아시아 국가 위주로 쏠려있는 상황 개선 필요
- ▶(내부위원) 재외국민보호라는 궁극적인 과제 해결에는 다소 미흡해 보이며,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치안시스템을 국내에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필요함

○ 한국경찰의 국제협력 범위를 국제기구 및 미주·유럽 지역 등으로 확대해, 한국경찰 국제위상 제고 및 국제치안역량을 강화 추진

※ EUROPOL, INTERPOL, UN-DPKO, UNDP 등과 공동 협력사업 등 적극 추진

○ 재외국민 치안만족도 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치안장비 수출을 지원하는 등 정책과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 적극 추진

※ 재외국민 치안만족도: '18년 5개국 500명 ⇒ 10개국 1,000명으로 확대

※ 치안장비수출: 경찰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MOU 체결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남북정상회담·6.13지방선거 등 다양한 국내현안으로 국제교류협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7년 실적치 대비 10% 증가한 적극적 목표 설정 '18년 국제교류협력지수는 18.85를 획득해 '18년 목표치(17.05) 대비 10.6%를 초과 달성하였고, 치안인프라전수지수는 34를 획득해, '18년 목표치(29.7) 대비 14.5%를 초과 달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치안 MOU 체결 △ 고위·중간·실무급 상호교류 △ 치안전문가 파견 교육 실적을 계량적인 지표(교육인원, 교육시간)로 설계 - 각 성과지표는 세부 지표별 차등 가중치를 부여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정책과제에 따라 총 15개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0% 달성 - 치안한류사업, 고위급 회담,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경찰청과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5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및 강화에 따른 한국인의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 8점을 획득해 당초 설정한 만족이상 목표치(7점)를 초과달성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 개최

- 경찰청장, 국회의원, 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의 신뢰성 확보방안’ 등 사이버 치안과 관련한 3개 주제에 대한 토론 등 실시(11. 13. 국회도서관.)\

○ 다크넷 범죄정보 수집방안 R&D 추진

- 과기부 협업 R&D 과제(다크넷 불법정보 수집방법) 완료, 연구 결과를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19년 예산 10억 확보

○ '18년 사이버위협 보고서 작성·전파

- 사이버도박·몸캠피싱 등 주요 사이버범죄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작성, 일선 수사관들에게 전파하여 향후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대응 역량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환류 확대 필요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영역 확장 필요
- 사이버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가 범죄 발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방안 마련 및 전략적 홍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예방·협력치안 기여도를 대변하는 5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 초과 달성 <table border="1"> <thead> <tr> <th>성 과 지 표</th><th>목 표 치</th><th>달 성 도</th></tr> </thead> <tbody> <tr> <td>인터넷사기 이력 조회 건수</td><td>13,686,217</td><td>17,064,083</td></tr> <tr> <td>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인원</td><td>348,781</td><td>365,418</td></tr> <tr> <td>사이버정보 활용도 지수</td><td>16.7</td><td>20.53</td></tr> <tr> <td>범죄단서 수집건수</td><td>1,092,206</td><td>1,131,825</td></tr> <tr> <td>국제공조 활성화 지수</td><td>385</td><td>670</td></tr> </tbody> </table>	성 과 지 표	목 표 치	달 성 도	인터넷사기 이력 조회 건수	13,686,217	17,064,083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인원	348,781	365,418	사이버정보 활용도 지수	16.7	20.53	범죄단서 수집건수	1,092,206	1,131,825	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385	670
성 과 지 표	목 표 치	달 성 도																		
인터넷사기 이력 조회 건수	13,686,217	17,064,083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인원	348,781	365,418																		
사이버정보 활용도 지수	16.7	20.53																		
범죄단서 수집건수	1,092,206	1,131,825																		
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385	670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2회)) △ 사이버 위협정보 전문가그룹(사이버테러·금융범죄·해킹침해 사고 전문가 12명) 컨설팅 진행 △ 현장 사이버수사관(지방청·경찰서) 대상 정책과제 관련 의견 수렴 - 사이버범죄정보의 유가치성 검증 방법 및 “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측정산식의 개선 필요성 도출 ○ (성과지표 개선 자체회의 개최) △ 사이버범죄 동향과 정책과제와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자체 회의 진행(사이버안전과장 주재) △ 지표의 개선·폐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 양질의 첩보 수집 및 첩보의 유가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사이버 범죄단서 수집 건수” 지표 발굴 - 단순 추세치에 근거한 목표치 설정이 아닌 국제공조 활성화 정도를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한 산식으로 개선 (이전) 이전 3년간 평균 공조건수 + 이전 3년간 평균 대비 증가 건수 (개선안) (3년간 평균 공조건수) + {가중치 1.3 × (연도별 공조증가건수의 3년 평균값)} ○ (성과평가위원 대면컨설팅 의견 수렴)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메일 무역사기 등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 추세를 반영해 국제공조 활성화 지수의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 -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간 사법공조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를 고려, ‘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비중을 늘리고(20%→25%),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인원’의 비중을 줄여(30%→25%) 지표 간 적절한 균형 유지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국민참여 중심 예방활동, △협업 기반 국민보호 활동, △사이버 미래 대응전략 마련, △현장치안력 강화, △국제협력 선도 기반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하에 39개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모두 정상 추진완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3년 연속 10대 피의자 수가 감소세(8,594명→6,801명→6,189명),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 및 홍보활동 등 맞춤형 예방정책의 효과성 확인 ○ 인터넷 사기 이력 조회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 DB 內 이용번호 수집건수 전년 대비 47.3%증가('17년 4,539건, '18년 6,684건)로 이력 조회 건수 증가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기능 고도화(모바일과 사이버캅(앱)을 통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접수 서비스 개시)로 전년 대비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접수 건수 80.9%↑, 국민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공고화 ○ 사이버성폭력 수사와 관련, 종전에는 어려웠던 해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적극 시행하여 국제공조 실적 급상승↑																		

(1) 평가결과

□ 추진 성과

○ 성폭력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26,921→26,285건)

- 학기초 학교 성폭력 예방(3~4월) → 전국 11,194개교(96.3%) 취약요소 점검 및 예방교육 5,546회 · 캠페인 2,935회 · 간담회 1,688회 개최
-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에 경찰위원(277명) 참여 → 특수학교 등 1,130개소 방문, 고위험학생 1,867명 정보공유를 통한 순찰강화 및 성폭력 등 34건 조치
- 여름철 해수욕장 · 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599명) 운영(6.21~8.31) → 예방교육 · 홍보 59,762회 전개 및 성범죄 31건 검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경고메시지 제작(6월) · 발송(年 2회) 및 소재불명자 집중검거기간 운영으로 26명 검거(5.8~6.12) → 성범죄자 적극적 재범 방지

○ 불법촬영 발생은 12.6% 감소(5,592→4,888건), 구속율은 1.0%p 증가(2.2→3.2%)

- 지자체 · 유관기관 협력, 공중화장실 · 기숙학교 등 38,957개소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 경고스티커 부착(5만부), 카메라 설치흔적(구멍 등) 등 시설주 개선권고(1,841개소)
- 비공개 촬영회 등 전방위 수사 → 촬영 강요 및 추행 - 촬영물 판매 · 교환 - 음란사이트 유포 - 디지털장의사 피해영상 삭제 거래 등 구조적 사슬관계 적발
- 불법촬영 적발시 저장매체(휴대폰 · 태블릿 등)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 확보, 추가범죄를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신병처리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세밀한 보호·지원

-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등으로 역고소되는 경우 피해진술 위축 등 2차피해 우려 → 검찰송치 전 역고소 수사중지하도록 개선
- 가명조서 적극 활용, 피해자·신고자 신상정보 노출 차단
- 속기사(5,555건)·진술분석전문가(2,737건)·진술조력인(1,323건) 등 피해자 조사時 외부 전문가 조력 활성화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 강원도 內 해바라기센터가 2개(춘천, 강릉)에 불과하여 피해자 지원에 한계 → 여가부 협업을 통해 원주 기독교세브란스병원 해바라기센터 신설
- 여청 진술녹화실 14개서 추가 설치 → 총 248개서 설치 완료 / 가·피해자 분리 등 인권친화형 조사실 15개서(43개실)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경찰신고 및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 안정적 정착

- <교육> 전국 확대 시행(3월) 前 여성청소년과장·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습위주 사전교육 확행, 정책 실효성 확보
- <고도화> 사례 추가, 외국인 특성에 맞는 모델 제작 등 수정·보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성폭력 미검률 3.6%로 성과지표 목표치 3.7% 달성 ※ {1- (성범죄 검거 25,339건 / 발생 26,285건)} × 100 - 특히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피해시점으로부터 기간이 많이 경과된 신고가 증가하여, 증거 확보 등 가해자 검거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성과의 질도 매우 높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정부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폭력 미검률은 '사회적 약자 보호' 핵심 성과지표 ※ 국민에게 공표된 약속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목표 달성여부가 정부정책 신뢰와도 직결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성폭력범죄 근절 및 미검률 개선을 위해 최초 수립한 세부 추진 일정 22개를 일정에 따라 100% 정상추진 완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성폭력 발생건수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 (26,921건 → 26,285건) - 특히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촬영 발생은 12.6% 감소(5,592→4,888)한 반면, 구속율은 1.0%p 증가(2.2%→3.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 강력범죄 엄정 대응 △ 위기청소년 집중관리 △ 맞춤형 예방활동
△ SPO 업무 정예화 등 현장중심 활동으로 소년범·학교폭력 감소
※ 소년범 : 72,752명('17년)→66,337명('18년) / 학교폭력 : 14,000명('17년)→13,367명('18년)
- 선도프로그램 연계대상 확대(소년범→비행청소년) 및 전문기관 중심 인프라 확충(209→234개) 등 운영 내실화로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증가
※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 ('17년) 27.6% → ('18년) 38.8%
- SPO제도 필요성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법적근거 마련 ('17.11월) 이후,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운영사항* 신설('18.12월)
* △ 운영주체 △ 배치기준 △ 수행임무 △ 학교와의 협력의무 등을 규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소년 폭력 예방 강화 대책」('17.12월)에 따라 소년범·학교폭력은 감소하였으나, 청소년 비행(유해환경 노출) 및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
⇒ 지속·체계적인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성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단속 등으로 비행청소년 선도·지원 강화
- 선도프로그램 연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선도프로그램 운영은 활성화 되었으나, 전문기관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내실화 필요
⇒ △ 자체선도프로그램 개선(본인 승인절차 신설, 표준모델 개발 등) 및 성과지표 보완을 통해 전문기관 중심으로 선도효과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33.8%	•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대상 확대(소년범→비행청소년) 및 전문기관 연계 인프라를 확대(209개소→234개소), 업무여건 개선 및 추진동력 확보 • 청소년 비행 증가가 우려되는 시기별 맞춤형 현장활동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선도프로그램 연계율은 전년대비 상승 및 목표치 상회 <table><tr><th>'17년 결과</th><th>'18년 목표치</th><th>'18년 결과</th><th>목표달성률</th></tr><tr><td>27.6%</td><td>29.0%</td><td>38.8%</td><td>133.8%</td></tr></table>	'17년 결과	'18년 목표치	'18년 결과	목표달성률	27.6%	29.0%	38.8%	133.8%				
'17년 결과	'18년 목표치	'18년 결과	목표달성률											
27.6%	29.0%	38.8%	133.8%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선도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자' 및 '소년범·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으로, 참여자에게 반성 및 비행성향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비행원인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청소년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도를 반영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시기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 완료 • 또한, '상반기 소년범죄 현황 분석'(7월) 및 '비행요인 분석'(9월)을 통해 「청소년 비행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소년범·학교폭력 검거인원이 전년대비 감소 <table><tr><th>구분</th><th>'17년</th><th>'18년</th><th>전년대비</th></tr><tr><td>소년범</td><td>72,752명</td><td>66,337명</td><td>8.8% ↓</td></tr><tr><td>학교폭력</td><td>14,000명</td><td>13,367명</td><td>4.5% ↓</td></tr></table> •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은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재범율이 낮으며, 이는 선도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일관된 지표로 나타나고 있음 ※ 재범률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19.6%), 미이수자(27.4%)	구분	'17년	'18년	전년대비	소년범	72,752명	66,337명	8.8% ↓	학교폭력	14,000명	13,367명	4.5% ↓
구분	'17년	'18년	전년대비											
소년범	72,752명	66,337명	8.8% ↓											
학교폭력	14,000명	13,367명	4.5%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정폭력 엄정대응 기조로 검거·(긴급)임시조치 등 객관지표가 증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활성화로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향상
* '17년 41.0% → '18년 50.4%(9.4%p ↑) ※ '18년 목표치(46.0%) 초과달성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신고율이 증가하고, 아동 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내실화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역시 향상
* '17년 25.2% → '18년 25.93%(0.73%p ↑) ※ '18년 목표치(25.9%)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 계획」 시행('18. 7월) 이후 검거·(긴급)임시조치 전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객관지표는 향상*되었으나,
 -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10.22.) 이후,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현장종결 처리하는 관행이 여전히 문제
- ➡ 한층 강화된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표준대응모델*」 수립·추진
* 112 신고 이력 관리 강화, 위험성 조사표 개선, 중대 가정폭력사범(흉기소지 등) 구속수사 원칙 등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즉시적인 강제제재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한계
*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 5백만 ↓,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 3백만 ↓
- ➡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案)*」에 따른 법개정 추진

※ 정부대책 中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사항

- ①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해자 ‘유치장 유치’ 조항 신설
- ②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③ 응급조치에 현행법 체포 추가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가정폭력 사건 대응률'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율' 모두 '16년 대비 사업실적이 상승하였으며, '17년 목표치 역시 초과달성함 <table><tr><th>지표</th><th>'15년 실적</th><th>'16년 실적</th><th>'17년 실적</th><th>'18년 목표</th></tr><tr><td>가정폭력사건 대응률(50%)</td><td>39.7%</td><td>40.6%</td><td>41.0%</td><td>46.0%</td></tr><tr><td>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율(50%)</td><td>-</td><td>24.6</td><td>25.2</td><td>25.9%</td></tr></table>	지표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가정폭력사건 대응률(50%)	39.7%	40.6%	41.0%	46.0%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율(50%)	-	24.6	25.2	25.9%										
지표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목표																							
가정폭력사건 대응률(50%)	39.7%	40.6%	41.0%	46.0%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율(50%)	-	24.6	25.2	25.9%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포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계 - 성과지표가 국민에게 좀 더 이해가 쉽고 공감이가도록 해외 유사지표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대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 호주의 성과목표'를 비교지표로 반영 * 호주, 가정폭력 관련 '신고건수'·'경찰개입 사례' 10%↑, '전문기관 이관 사례' 15%↑ 목표 · 아동학대도 미취학·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 연계하는 활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지표 설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총 16개의 일정을 추진 시기에 따라 고루 분배하여 과제내용과 추진 일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추진일정을 모두 완수하였을 경우, 목표치 초과달성을 기대할 수 있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가정폭력 엄정대응 기조로 검거·긴급임시조치 건수 증가 추세로 전환 < 월별 가정폭력 검거 및 (긴급)임시조치 건수 > <table><tr><th>구분</th><th>'17년</th><th>'17.9월</th><th>'18.9월</th><th>대비(%)</th></tr><tr><td>검거건수</td><td>38,583</td><td>24,913</td><td>25,797</td><td>3.5 ↑</td></tr><tr><td>(긴급)임시조치</td><td>5,480</td><td>4,324</td><td>4,524</td><td>4.6 ↑</td></tr></table>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상담시설, 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table><tr><th>구분</th><th>'17년</th><th>'17.9월</th><th>'18.9월</th><th>대비(%)</th></tr><tr><td>연계(건)</td><td>36,904</td><td>23,378</td><td>34,291</td><td>46.7 ↑</td></tr></table>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 향상 - 지속적인 신고활성화 노력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도 향상,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 증가('17.9월 9,734건 → '18.9월 9,943건) - 또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도 8.3% 증가('17.9월 2,710건 → '18.9월 2,934건) ·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전년 동기간 대비 2.6% (25.2%→25.9%) 향상 -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인계하거나 전문가 연계를 통해 의료·법률적인 지원 등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인권 증진 · 미취학·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 내실화로 아동안전 확보 - 교육부·경찰 합동점검('18.2~), 총 447명 의뢰, 444명 소재확인 (14건 입건)	구분	'17년	'17.9월	'18.9월	대비(%)	검거건수	38,583	24,913	25,797	3.5 ↑	(긴급)임시조치	5,480	4,324	4,524	4.6 ↑	구분	'17년	'17.9월	'18.9월	대비(%)	연계(건)	36,904	23,378	34,291	46.7 ↑
구분	'17년	'17.9월	'18.9월	대비(%)																							
검거건수	38,583	24,913	25,797	3.5 ↑																							
(긴급)임시조치	5,480	4,324	4,524	4.6 ↑																							
구분	'17년	'17.9월	'18.9월	대비(%)																							
연계(건)	36,904	23,378	34,291	46.7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적극적인 신변보호 활동으로 국민신뢰도 제고

- 관서별 ‘신변보호심사위원회’ 및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신변보호시스템 구축, 보복범죄 또는 재피해 우려 대상자에 대한 보호 강화(약 9,100명, 전년비 36%증가)

○ 다양한 피해자지원으로 신속한 일상회복 도모(10월말 기준)

-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례회의’를 통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실시

피해자상담	현장출동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법률 등 기타
19,047건	1,441	6,296건	6,569건	1,542건

- 피해자심리전담인력 운영(76명), 앱 개발 등 심리적 응급처치 강화
-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시 즉시(2일 이내) 피해현장정리 지원(104건)

○ 형사절차 참여 지원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10월말 기준)

- (정보제공) 피해자권리·지원제도를 E-book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피해자여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를 위해 여비(1인 24,000원) 지급(3,588건)
- (범죄피해평가)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피해 영향·결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사건기록에 첨부, 구속·양형 등에 활용(941건)

○ 피해자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로 서비스 질적 향상

- 피해자 전담인력 정원 확보 추진(254개서), 지속가능한 업무체계 구축
- 피해자전담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5개년 경력채용 진행 중(18년 36명 채용완료)

※ 심리전문가 45명을 위기개입상담관으로 채용, 광역단위 지원체계 마련

- 피해자보호지원 매뉴얼 업데이트 및 위기개입표준모델 마련
- 피해자전담경찰관 대상, 피해자 보호·지원 심화 과정(2주) 운영(年 270명)
- 「CARE포털시스템」 지속 개선, 사례공유로 업무역량 상향 평준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신변보호, 피해자지원,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전담인력 전문성 제고 등 종합적 정책 추진을 통해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수행
 - 다만, 범피기금 집행체계 개선은 타기관(법무부, 국회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서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성과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음
 - 학계 중심으로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범죄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협업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학계 외에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정책과제 대표성 및 지표 설계 적정성	13.778/15	• 내실있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도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 ※ 일부 피해자 설문조사 등 반응을 포함시킬 것을 제언하거나, 신변보호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표 수정을 제언
1-2. 정책과제의 연계성	4.778/5	• 피해자보호 및 권리강화 등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고, 범죄피해 평가를 통한 형사절차 지원 등 대내외적 연계성이 인정된다는 평가
2-1. 추진계획 준수 정도	5/5	•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여 만점 획득
2-2.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8.667/10	• 법률개정·예산확보·현장활동 강화 등 전반적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대부분으로 우수한 평가를 획득하였으며, 정책수행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노력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음
2-3. 업무 추진과정 협업도	9.222/10	• 외부 부처,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으로 법령 개정 등 추진 • 피해자 보호체계를 피해자와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 노력을 높게 평가 ※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외 협업이 학회·대학 등 학계에 편중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외 다른 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제언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8.778/20	• 전반적으로 목표치의 적극성과 성과달성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위원은 실적치 상승세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보다 높게 설정할 것을 제언하기도 하였음
3-2. 정책 효과성	13.222/15	• 적극적인 신변보호 등 정책 효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 ※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부정적 언론 보도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어 정책 효과성 부분에서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음
4-1. 대내외 의견수렴	5.667/6	• 대내 6회, 대외 7회 등 현장의견, 전문가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
4-2.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5.556/6	• 언론 홍보 등 전략적 홍보 노력이 인정됨
4-3. 정책 소통 및 환류	7.333/8	• 경찰개혁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과제로 반영하고, 피해자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환류하는 등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불법영업 근원적 차단활동 추진성과

구 분	'17. 10월	'18. 10월	비고
기소 전 물수(건)	84건	406건	383.3% ↑
건물주 처벌	300명	526명	75.3% ↑
불법게임기 압수(대)	46,222대	59,344대	28.4% ↑

○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 도입으로 성매매 차단 효과 거양

- 추진성과(기간 9.10~12.31) : 6,090건 차단
- 효과 : 연 2만 건 광고전화 차단, 노상에 살포되는 전단지 감소로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입환경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대외 홍보 미흡으로 경찰 추진사항에 대한 이해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수립 前 외부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다양하게 의견수렴하고 정책 추진과정을 홍보하여 업무추진시 비난·오해소지 없도록 조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ACS시스템 활용 전화번호 이용정지 목표(661건) 달성 - 이용정지 건수 : 6,090건 - 생활질서 위반사범 목표점수(25.7점) 달성 - 달성점수 : 28.0점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전국 생활질서계 현원 1,165명 중 풍속담당은 460여명에 불과하지만 생활질서 위반사범 달성점수는 1,165명을 기준으로 28.0점 달성 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분기별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목표달성 함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적은 인력으로 성매매사범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ACS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과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큰 성과를 거둠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감소,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

- 운전자가 면허취득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올바른 운전습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교육 개선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
- '18년 11월 기준, 교통사고 발생건수 199,005건, 사망자 3,443명, 중상자 64,59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자 및 중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
'17. 11월	198,086	3,830	71,948	204,149	19,688
'18. 11월	199,005	3,443	64,596	207,619	22,119
전년대비 (%)	0.46%	-10.10%	-10.22%	1.70%	12.35%

- '18년 11월 기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등 운전자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대부분 작년 동기간에 비해 감소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구 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17. 11월	190,426	58,912	2,615,378	212,569
'18. 11월	153,346	46,044	2,274,650	164,310
전년대비 (%)	-19.5%	-21.8%	-13.0%	-22.7%

○ 해외여행객 편의 제고

- '18. 7. 30. 인천공항 內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정식 개소 이후 총 8,733명이 방문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그 중 17명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의 日 평균 국제운전면허 발급건수는 105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 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평균 발급건수인 21건에 비해 5배 가량 높음

구 분	총 계	8월	9월	10월	11월
발급건수	8,733건	2,344건	2,163건	1,968건	1,914건
日 평균	105건	97건	127건	93건	87건

- 특히, 인사혁신처 주관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앙부처 부문 최우수상(1등)을 수상

○ 장애인 인권 향상 및 이동권 보장

- '18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 1,325명에 대해 운전교육을 지원하고, 675명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전체 교육 지원 5,207명, 면허취득자 2,275명)
- 교통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운전교육을 통해 약 5억원의 경제적 지원효과 창출(1인당 면허취득(교육)비용 : 40만원) 및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권향상에도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하고, 교육을 의무화하였으나,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항 內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바, 다른 공항에도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추가 개소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교통사고 심각도,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모두 목표치를 100%이상 초과 달성하였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①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 - 교통사고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부상자별 가중치를 부여, 중요 교통사고 감소에 초점을 맞추는 등 전체적 교통안전 확보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와 ② 초보운전자(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 교통사고 발생률 -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체계적인 운전교육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정지표로 구성되어 정책과제와 밀접하게 연계 중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 12건 모두 일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였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가 감소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되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및 국민 편의가 향상되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관·학 유간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 － (협업체계 구축)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통정책과 관련 있는 민·관·학 협의시스템을 구축, 同 정책의 추진동력으로 활용
-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실 방문 설명 등 노력으로 시인성 법안 통과
 - － 시설물을 관리할 때에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안을 수정 후 직접 의원실 방문하여 법안통과 필요성 및 취지를 설명하여 법사위 통과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과제의 30%를 차지하는 시설·규제개선 노력도는 단년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으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올해 달성하지 못한 성과가 존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계획수립 시 해당연도에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설정하지 않고,
 - － 해당 과제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 후, 다년도에 걸쳐 계획수립이 필요한 과제는 연차별로 목표를 선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8% 99% 101.1%	-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60%) : 목표달성 - 시설·규제 개선 노력도(30%) : 국민의견수렴이 중요한 적신호시 우회 전방법 개선제외 달성 - 보행환경 인프라 개선 만족도(10%) : 목표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 교통사고 심각도는 최근 3년 평균의 13%초과 목표달성 했으며, △ 시설·규제 개선 노력도는 매년 공감받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가 높고, △국민만족도는 대부분 '보통'으로 평가하는 집중화 경향에 따라 난이도와 성과의 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
3. 추진일정의 충실성	95%	- 외부사정에 의한 일부과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충실히 이행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강력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축*

* 11월말 기준, 전년 대비 9.3%(-320명) 감소로 2002년(-10.8%) 이후 최대폭 감소

구분	전체	보행자	노인	어린이	음주운전
’18년 1~11월	3,443	1,318	1,523	34	260
’17년 1~11월	3,830	1,509	1,621	50	409
대비 (%)	-387(-10.1)	-191(-12.7)	-98(-6.0)	-16(-32.0)	-149(-36.4)

- ‘차량소통’·‘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적극 추진

※ 4개 핵심 분야*, 총 30개 추진 과제 선정

* ① 「보행자」 우선 ② 「교통약자」 보호 ③ 「안전관리」 강화 ④ 「안전문화」 확산

- (보행자 우선) △ 보행사고 다발지역 교통경찰 집중배치 △ 시내도로 구간 과속단속 장비 신규 설치(6개소) 보행 친화적 인프라 개선

▶ 최근 3년간 사망 및 중상 보행사고 5건 이상 발생 지점 6,379개소 선정

▶ 개학철, 봄행락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 맞춤형 보행안전 정책 추진

▶ 시내지역 보행사고 다발지역 총 6개소에 구간단속 장비 설치

※ 서울(도봉), 경기(시흥), 강원(춘천), 울산(남구), 경남(창원), 제주(서귀포)

- (교통약자 보호) △ 어린이 △ 노인 등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지원 정책 중점 추진

▶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 신설,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등하교 시간대 지자체 합동으로 안전활동 주력

▶ (노인)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단축(5년→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

- (안전관리 강화) △법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음주운전 강력 대응 △정확한 사고다발지역 분석 및 안전활동 집중 추진

- ▶(제도개선)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등
- ▶(음주운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11.1.~'19.1.31. 3개월간) △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법정형 상향 등 도로교통법 개정(12.24.공포)
- ▶(사고다발지역) 교통사고 GPS정보를 기반으로 최근 3년간 사망 중상 사고 5건 이상 발생 지점 분석,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보행사고 6,379개소 / 차대차 사고 4,777개소)

- (안전문화 확산)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교통문화 홍보영상 등 제작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등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 주력

- ▶(캠페인)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3.8. 경찰청장, 서울시 교육감 등 참석) / 교통사고줄이기 한마음대회 (5.29. 행안부장관·경찰청차장 등 참석)
- ▶(홍보영상 등)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홍보 영상(9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관련 공익광고(코바코 협조, 11월), 경찰청장 출연 라디오 홍보(10월) 등
- ▶(맞춤형 교육) ‘지켜요 30’ 형광 가방덮개 34,000개·야광스티커 198,000개 배부 /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153,501회)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고속도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2.2%, +5명)
- 특히 고속도로상 승용(-7%, 7명)·승합(-56.5%, 13명) 사망이 모두 감소한 반면, 화물(6.12%, 6명)·특수(633.3%, 19명)는 증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속도로에 대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현장단속 강화
 - ※ 드론 연계 특별운영 전개, 가시적 예방단속으로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 매월 유관기관 합동 정비불량, 과적 단속 등 안전관리 주력
 - ※ 자동차관리법·화물운수사업법 위반 등 실효적 제재 위주 단속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34.9%	•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은 평균 -4.2%로, '18년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3년 평균치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적극성 등급 : '상') • 18년 목표치는 17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4.3% 감소였으나 18년 11월 기준, 17년 같은 기간 대비 10.1% 감소 (목표 대비 234.9%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성과지표는 전년과 대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 감축'이라는 정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 충분한 지표임 •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는 '교통업무시스템(TCS)'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매우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며, 국정과제 등 주요 정부정책 평가뿐만 아니라 OECD 국가간 교통안전도를 비교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표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계획된 모든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였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음주처벌 강화·전좌석안전띠 의무화 등 적극적 제도개선 및 대대적 대국민 홍보, 사고다발지역 위주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정책 추진으로, 11월말 기준, 전년 대비 9.3%(-320명) 감소하여 2002년(-10.8%) 이후 최대폭 감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요 사회 현안분야 기획수사

-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사범 사건을 공소시효 내(~ 12. 13.) 전원 처리, 총 1,874명 기소의견 송치(구속 32)
- (생활적폐) 8개 생활적폐 과제 설정 후 7월 ~ 9월 특별단속 실시, 기간 내 549건·4,434명 검거
-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17년 1월 ~ '18년 1월 특별단속 실시, 93건·184명 검거(제도개선 4건 통보)
- (불법대부업) 최고금리 인하(27.9% → 24%) 대비, 2월 ~ 4월 불법대부업 특별단속 실시, 531건·956명 검거

○ 수사역량 강화 및 홍보활동

- (보이스피싱 전담팀 편성) 보이스피싱 전종수사팀* 구성,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관할 정리로 보이스피싱 집중수사체계 구축
* 전 지방청 지수대(20개·100명), 11개 경찰서(52명)에 전종수사팀 운영
- (홍보활동) ① 보이스피싱 관련 TV광고(9 ~ 10월)·대국민 문자발송(4. 16. ~ 4. 25.), ② 주요 현안 관련 보도자료 배포(17회) 등 홍보 전개
- (유관기관 협업) ① 외국 수사·금융기관 공조회의(보이스피싱 등 3회), ② 기획수사 과제 관련 타부처 회의(FATF 관련 등 20회) 수시 참석
- (내부의견 수렴) 전국 지수대장·광수대장, 경제팀 워크숍 등을 개최, 적극 의견 청취하여 워크숍에서 제시된 직제개편* 작업 계획 중
* 경제팀 소팀제·경제팀장 중심 수사체제

⇒ 위 정책과제 등에 대해 최종 95.73점으로 평가 결과 확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미흡요인

-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단 의견이나,
① 지표설계 적정성, ② 정책효과성 부분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
※ 지표설계 적정성에서 0.8점, 정책효과성 부분에서 0.7점 감점

○ 지표설계의 적정성

- 정책과제 평가지표로 ① 보이스피싱 전체 피의자 중 인출책 이상 검거율, ②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건수, ③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증감율, ④ 기소 전 몰수보전 금액을 설정
 - 위 지표 중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증감율’ 지표는 10% 상승 목표 설정하였으나 실제 43.1% 증가해 목표치의 431.4% 달성
- ⇒ 일부 지표가 타 지표에 비해 달성도가 매우 높아 처음부터 성과 지표를 보수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일부 평가위원 지적사항

○ 정책효과성

-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홍보·단속활동을 전개 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은 역대 최고치 갱신
- ⇒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한 검거기법 개발 및 공유, 홍보컨설팅 결과('18.2. ~ '18.4.)에 따른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전적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최근 3년 내 성과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나, 관련시책 실시여부 등을 추가 반영, 평균치 이상의 지표 설정 추진

○ 보이스피싱 종합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 범죄수법 공유,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 홍보계획 수립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① 보이스피싱 인출책 이상 검거비율(20.5% 설정, 25.5% 달성), ② 고위공직자 비리 검거건수(100명 설정, 193명 검거), ③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건수 증감율(10% 설정, 43.1% 달성), ④ 기소 전 몰수보전 금액(190억원 설정, 210.5억원 달성)를 성과지표 설정 ⇒ 위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 수치보다 110%이상을 달성하였으므로 100% 완수한 것으로 평가
2. 성과지표의 적절성	95%	▶ (전화금융사기) 실제 범죄조직원 검거건수를 바탕으로 실제 범죄 조직 검거비율·홍보성과 반영 여부를 알 수 있어 성과지표화 ▶ (부패범죄) 고위공무원 관련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경찰 수사역량 강화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이므로 검거수치 성과지표화 ▶ (기소 전 몰수보전) 현행 법령 상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가 경찰 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범죄수익 추적역량 강화와도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성과지표화 ▶ (특정금융거래정보 신청건수)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지능범죄의 추적단서이자, 중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FATF 대비 등 국가 과제와도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성과지표화 ▶ (보완점) 그러나 최근 3년 내 평균수치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산출하여 여러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가분 미반영 가능성 존재 → 다각적 검토로 최대한 도전적 목표 설정 추진 ⇒ 위 지표는 경찰수사역량의 기초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과제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여 적절히 지표설정 하였으나 향후 도전적 목표수치 설정이 필요해 95% 완수로 평가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 상 주요 기획수사(연중, 특별단속 동시 시행) 100% 완료 ▶ 매뉴얼·지수대 운영규칙·공인회계사 경력채용·워크숍·위폐 감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수사역량 강화추진 계획 이행 ▶ 가상통화 투자사기·위장형카메라 특별단속·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단속 실시 ⇒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 정상추진 및 사회현안에 따른 신규 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100% 완수한 것으로 평가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00%	▶ (기획수사) 전화금융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 및 부패범죄 총 15개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실시하여 성과목표치 초과 달성 ▶ (홍보활동) 보이스피싱 TV광고, 주요 사회 현안 관련 보도자료 배포(17회)로 즉시성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시적 성과 달성 ※ TV광고 방영기간(9~10월)내 보이스피싱 발생 10%↓ ⇒ 시의적절한 기획수사,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실제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되므로 100% 완수한 것으로 평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외사치안 불안요소에 선제적·종합적 대응, 전년대비 외국인범죄 감소 3.4% 감소
 -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19개소), 특별치안활동 전개
 -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확대(11개→14개 관서) 및 운영규칙 제정(10월), 공동체 치안 구현
 - 국제범죄수사대 수사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해외 전문화 교육 신설
 - ※ △’19년 사건수사비 등 수사예산 증액, △’18년 해외 전문화교육 예산 순증
 -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 과학적 치안을 통한 외국인 대상 현장 법집행력 강화
 - ※ ‘모바일 생체인식(지문·얼굴)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19년 예산 약 1억9천만원)
- 유관기관 협업 강화, 산업기술유출 ‘수사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국정과제 뒷받침
 - ‘BH 반부패 정책협의회’·‘凡정부 중소기업 기술근절 TF’ 참여, 수사분야 선도적 역할 수행
 - ※ 법·제도 개선사항 제언 및 해외유출 사건 수사역량 집중 등 문제해결형 경찰활동 전개
 - 산업기술유출 기획수사(4~9월) 해외유출·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중점 수사
 - ※ 67건(178명) 검거, △전년대비 해외유출 검거 71%↑(7→12건), △구속 133%↑(3명→7명)
 - 산업보안협의회(9개청)·산업보안협력관(4명) 운영을 통한 피해신고 활성화
 - ※ ’19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대폭 확충(60명 → 77명)
- 국제공조 강화로 재외국민 안전 확보 및 국외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총재 선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찰 위상 확보
 - 각국 인터폴(194개), 주요국 핫라인(중국 및 동남아 등)의 공조 네트워크 적극 활용
 - ※ △재외국민 사건사고 공동조사 실시 △도피사범 검거 등 성과 거양(전년대비 265명 → 304명)
 - ’17년 이후 필리핀內 한국인 피살 대폭 감소, 前 4년 평균(8명) 대비 75%↓
 - ※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상대적 저조(20점 만점 중 17.889)
 - 평가 매뉴얼상 ‘적극성 판단’은 i) ‘최근 3년(또는 2년)간 실적치 평균 이상’ 또는 ii) ‘전년도 실적치 대비 10% 이상’ 여부로 구분
 - ※ 외사수사과 정책과제 각 항목별 목표치는 前 3년(또는 5년) 대비 10% 이상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목표달성도 역시 각 100% 이상 달성하는 등 최소 S등급 이상
 - 일부 평가위원이 ‘전년도 실적대비 10%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등급으로 평가(이의제기 불수용)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 필요(’18년 본평가)
 - ’18년 총 38회 대·내외 의견수렴을 실시, 본평가(11월) 이후에도 현장 의견(4회)을 지속 수렴하는 등 정책 환류를 통한 성과향상 추진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본 과제의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각 103%, 104%, 101%) • 평가위원 주요 의견 및 제언으로는 - △목표치 초과달성 노력 우수, △성과 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등 목표달성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성과지표가 課 중점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통해 과제평가가 가능해 과제지표 적절성이 인정됨 • 평가위원 주요 의견 및 제언으로는 - △정책과제의 대표성과 지표설계 매우 적절, △정책과제 대표성 우수, 지표설계의 적정성 매우우수 등 모든 위원들이 우수 이상 평가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목표한 17개 추진계획을 모두 기한 내 완료, 일정 준수율 100%를 달성함 • 평가위원 주요 의견 및 제언으로는 - △추진계획 준수 노력은 매우 우수, △추진계획에 따라 잘 준수함,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판단 등 모든 위원들 긍정 평가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외사사범 검거> 기획수사를 통한 정량성과 도출, 다각적 치안활동 전개로 외국인범죄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외사안전구역 체감안전도 향상 • <산업기술유출사범> 해외기술유출 검거 증가, BH·국회 등외 공식적 성과 인정, 기업들의 산업기술보호 인식 제고 등 정책효과 발생 • <국외도피사범송환>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당선,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 증가(’18년 304명), 국회의 인터폴 중요성 인정 등 효과 발생

(1) 평가결과

□ 주요 성과

-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해안경계 과학화** 추진(국정과제 14-5)
 - 의경 폐지에 따라 인력위주 해안경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 필요 최소인력이 해안경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초소에 TOD·CCTV 설치, 통합 상황실 구축** 등 첨단 시스템 구축
 - 국회 행안위 위원들로부터 **효율적인 의무경찰 대체 사업으로 긍정 평가**(행안위 검토 보고서)를 받는 등 **국정과제 우수 이행**을 넘어 **획기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19년 추진 예산 139억 확보, 단일 사업으로 경찰청 1위 규모)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국정과제 3-56)
 - 경찰청장·소방청장과 업무협약 체결,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메르스·대형화재·조류독감·태풍 솔릭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현장 지원 실시 및 대응 매뉴얼 개정(17건) 등 즉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표 개선 필요) 성과 지표 중 ‘경찰작전부대 역량 강화도’의 점수 측정 기준에 대하여 現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시율로 측정하는 방식에 ‘**교육·훈련성적**’도 반영해야 적절하다는 의견 제기

(現 경찰작전부대 역량 강화도 지표 점수 측정 방식) 작전부대 교육·훈련 실시시간 /계획시간 → (화기학실시/계획+ 전술학실시/계획+ 일반학실시/계획+ 부대훈련실시/계획) × 5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표 개선 추진) ‘경찰작전부대 역량 강화도’ 지표의 경우 '18년 신설된 지표로, 신설 지표인 만큼 실시율이 중요하여 이를 고려해 교육·훈련 실시율을 기반으로 점수를 측정토록 설계
 - 향후 연차적·단계적으로 교육·훈련실시율 뿐만 아니라 **교육성적 또한 반영토록** 점수 측정 방식 개선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위기대응 역량강화도</td><td>84</td><td>97.8</td></tr> </tbody> </table> 산출 내역 · 유관기관 합동 위기상황대응 체계 구축 노력도 (50점/50점 만점) · 경찰작전부대 역량 강화도 (48.5점/50점 만점) · 현장부대 대응역량 강화도 (-0.7점) ▶(유관기관 합동 위기상황대응 체계 구축 노력도) - 기관장(경찰청장·소방청장) 업무협약 실시(4.24), 현장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 특히 유관기관 합동 현장매뉴얼 작성 12건(5건→17건) 증가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 위기관리 역할 명확화를 위한 토대 마련으로 50점에 해당(50점 만점) ▶(경찰작전부대 역량 강화도) '18년 경찰 주도적인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48.5점(50점만점) 이라는 가시적 성과 창출 ▶(현장부대 대응역량 강화도) 전국 112타격대 대상으로 역량평가 대회를 실시하여 부대별 평균점수 합산 후 '전년도 평균점수와 차'를 합해 반영 ('18년 87.8 - '17년 88.5점 = -0.7) → 목표치 대비 16% 초과달성하는 등 적극적인 성과 달성 수행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위기대응 역량강화도	84	97.8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위기대응 역량강화도	84	97.8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공고화'라는 위기관리 센터의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관성에 초점, 현장 의견 및 컨설팅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표 선정 -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테러 등 비상상황 대비, 국가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유관기관 활동과 체계구축 노력도를 선정 - 경찰 주도적인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경찰작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신규 지표로 도입 - 상황발생 시 초동조치가 핵심인 만큼 초동조치 부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밀접하게 설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계획된 총 25개 중점 추진 과제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19년 해안경계과학화 139억 등 예산 신규 확보 ▶ 유관기관 합동 매뉴얼 작성 '17년 5건 → '18년 17건 ▶ 경찰청·소방청간 업무 협약을 통한 현장 대응체계 명확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테러 기반 구축(조직·인력·장비 등)

- 신속한 테러 대응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남부·경남청 특공대 창설 인력·예산 확보, '19년 전국 10개 경찰특공대 운용
- '19년 지방청별 화생방연구사 채용(17명, 지방청별1),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화생방 대테러체계·대응기법 연구 및 전문성 강화
- 新유형 테러 대응을 위한 드론 전파차단기(5대 운용중), 신형 장갑차(7대) 등 대테러 장비 현대화, '19년 장비구입예산 88억원 확보(전년비 35%↑)

○ 선제적 테러 예방활동, 실전 위주 교육훈련

-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지원
 - ※ 대회 기간(2.9.~25.) 중 대회 시설 특공대 121명 배치하여 대테러 안전 확보
- 화생방테러 대응 협업체계 강화 위해 경찰청 주도 화생방테러 공동 대응 협의체 운영(2회), 지방청별 지역협의체 신설('18.12월 8개 지방청 完)
- 대국민 테러 경각심 제고 위한 '테러예방 공모전' 개최(동영상·웹툰)
- 현장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맞춤형 교육, 테러 유형별 교육 체계화·전문화
 - ※ (현장지휘관) 전국 경찰서장 대상 통합지휘능력 배양 특별순회교육
 - (대테러부대) 정예부대 특공대 전문화교육(상·하반기)
 - (현장경찰관) 경찰서 쏠 직원 대상 초동대응 등 교육, 사이버 교육강좌 개설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관계기관, 대국민 등 대외 의견수렴과 정책환류 보완 필요

- ※ 대테러 장비실무 협의체, 대테러분야 교수요원 간담회, 전국 대테러 담당자 워크숍 등 대내적 의견수렴·환류 활동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므로 대외 의견수렴 환류 보완 필요(평가위원 지적사항)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외 의견수렴 · 정책환류 보완

- 경찰청 주도로 진행중인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 등 의견을 주기적 수렴, 경찰 대테러 정책 개선

○ 성과지표 개선 · 보완

- '18년 신규 성과지표 설정은 긍정적이나 경찰의 현장활동과 연계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평가위원 의견
- 경찰의 현장활동 · 국민체감 안전과 연계된 성과지표로 개선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2%	• 각 목표치 설정요소가 적절했으며 그에 대한 근거 제시를 통해 대테러 훈련 평가 달성도 역시 좋은 의미가 있으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목표치 성과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테러예방활동 등 설계의 방향성 양호 • 전반적으로 지표 대표성 및 적정성 우수 • 훈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건출동 등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추진계획에 따른 다양한 운영이 훌륭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추진계획에 따라 수행이 준수되었다고 판단됨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인프라 확충 등 효과성 우수 • 유관기관의 합동훈련과 대테러 경각심 제고 등 효과. 지역협의체 신설을 통한 화생방테러 등에 대한 정책은 큰 효과 기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보안경찰 개혁방안’ 마련 및 주요 과제·목표 적극 달성중

- 경찰 5대 개혁과제* 中 하나인 ‘보안경찰 개혁방안’을 경찰개혁위와 협업을 통해 마련('18.6.8), 총 9개 세부과제를 체계적 달성중
*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 △경대개혁 △정보경찰 개혁 △보안경찰 개혁
- 특히, 국민에게 체감효과가 큰 대표적 개혁과제인 ‘보안분실의 청사內 이전’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18.10.31), 이행중

○ 보안경찰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인권의식 심화

- △ 신규 전입직원 교육(474명<99%>) △ 직무전문교육(314회) 등을 통해 높은 교육만족도(93점)을 획득하였으며,
- ‘보안경찰 맞춤형 헌법교육('18.10월~)’을 통해 교육과정에 헌법 과목 신설 등 인권·헌법적 가치가 업무의 근간이 되도록 추진

○ ‘보안경과 선발제도’ 지속적 관리를 통한 우수인력 유치

- 총 4회(1.30·5.30·8.2·9.13) 전국적 의견수렴을 통해 보안경과 선발·갱신 시험에 대한 의견을 종합, 경과제도 개선 및 시험 성공 실시
※ 제4회 보안경과 갱신·선발시험 실시(총 147명 신규선발, 2,016명 갱신)

○ 현장감 있는 ‘보안경찰 홍보활동’을 통한 대외 이미지 개선

- 본청 중심의 보안경찰의 날 행사 및 안보홍보 개념에서 탈비, 보안경찰 활동 및 인권보호 등을 알리는 현장감 있는 홍보로 전환
※ 「2018 나라사랑 콘테스트(10.25)」에 18,313건의 응모작이 접수되는 등 (전년 대비 13% 증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안경찰의 활동상을 홍보

○ 온·오프라인을 통한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다각적 실시

- 기존 지방청 등 집체교육에서, 탈북민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는 교육(소규모·그룹별)으로 전환한 바, 실시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16년 32회 → '17년 308회 → '18년 1,108회 실시
- 생업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어려운 탈북민(교육의 사각지대) 존재
⇒ 모바일 교육이 가능토록 ‘범죄예방교육 앱(App)’ 제작·배포(9.13)

○ 완벽한 탈북민 신변보호 실시(위해사례 0건)

- 신변보호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워크숍 등) 및 통일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탈북민에 대한 신변위해 사례가 '18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음

○ 탈북민 정착지원의 가교 역할을 지속 수행('18년 재입북 0건)

- 평소 탈북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보안경찰은 ‘통일부 등 정착 지원 기관-탈북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 국내 정착 부적응의 결과로 발생하는 탈북민 재입북('17년 임지현 사례 등)이 '18년에는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보안경찰 개혁방안’의 경우, 개혁위-보안국間 협의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산출한 ‘능동적 노력의 결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개혁의 시작(개혁위 요청)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의적 노력이 아닌 수동적 결과물’로 해석, 좋지못한 평가를 내린 경우 상당수

- 탈북민 분야 핵심정책인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의 경우, 정책수립 취지는 훌륭하지만 ‘일선 보안경찰의 활동결과를 취합하여 이것으로 평가받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등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 등 존재
 -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본청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취지
 - 한편, ‘탈북민이 급증하여 보안경찰이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는 수준임에도 본청 차원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18.11월 정책과제 최종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안경찰 개혁은 수동적 결과물’ 요지의 평가와 관련) **향후 개혁방안의 내용·인권보호 취지 등을 정책과제로 적극적 전환(표현) 필요**
 - ※ '18년의 경우, 정책과제 수립시기(3월)과 개혁위 권고안 확정시기(6월)가 상이하여 정책과제에 개혁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 － ‘보안활동 기반조성’은 안보수사본부 신설 준비(개혁과제)를 위해 **보안경찰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과제로 전환 필요**
- (‘탈북민 범죄예방은 현장의 활동결과 취합에 불과’ 요지의 평가와 관련) **향후 탈북민 신변보호지침 개정 등 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
 - ※ 정착지원법에 규정된 보호기간(5년)을 경과한 탈북민은 신변보호를 원칙적으로 종료하여 현장의 부담 해소 및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보호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6% (초과달성)	·‘보안활동 기반조성’은 당초 목표치인 92.6점을 상회하는 96.2점(103.9% 초과)을 달성하였음 - 세부항목 中 ‘보안경과자 선발·배치율’ 및 ‘보안경찰 홍보활동’ 지표는 만점을 달성하였으나, ‘보안경찰 전문교육’ 지표의 경우 △ 교육만족도(14점 / 15점) △ 교육이수율(93%)이 만점에 미달 ※ 미달사유는 목표치 과다설정(교육만족도는 평균 100점, 교육 이수율은 초보안경찰 현원의 50%이상을 연간 교육해야 만점)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및 정착지원’은 당초 목표치인 85.0점을 상회하는 92.0점(108% 초과)을 달성하였음 - 다만,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지표는 50점 만점에서 45점 △ 정착지원 우수사례는 20점 만점에서 17점 획득에 그침 ※ 미달사유는 목표치 과다설정(범죄예방교육은 전년 실적의 3배, 정착지원 우수사례는 340건<예년 평균 100~200건>을 목표 설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정책과제 최종평가시 해당 항목이 15점 만점에 14.2점을 획득하는 등 보안1과의 업무성격에 맞는 지표를 적절히 설정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18년 연간 목표한 월별 과제를 모두 정상추진·달성하였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정책과제 최종평가시 15점 만점에 13.6점을 획득하는 등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모두 달성되었음 ※ 다만, 보안의 경우 (생안·수사 등과 달리) 치안효과성을 입증하는 표본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책효과성을 통계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점이 평가상 약점으로 작용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검거역량 강화 → 수사의 질 향상 → 무죄사건 감소’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18년 과제설정을 통해 성과의 질 향상
 - 중요 안보위해 사범 검거율 20%, 1심 무죄율 0% 달성
- 평창 동계올림픽·페럴림픽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 각종 문화·체육행사 대회의 차질 없는 진행에 이바지
 - ’18년도에는 국제적 행사 등 남북교류 행사가 10건(250%)으로 급증하였음에도 안정적인 행사관리를 위한 보안활동을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량평가는 비교적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업무 특성 상 ‘정책 홍보 노력도’, ‘정책 효과성’ 등 정성평가 분야 점수 저조
- 보안국 추진업무에 대한 홍보 등 부서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노력을 기울였으나 타 기능에 비해 저조한 실적으로 개선이 요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성평가 결과 측정 시 ‘전년 대비 개선도’, ‘목표 값 대비 실적’ 등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
- △ 주요 판례에 따른 교육 자료 배포 △ 우수 수사사례 공유 △ 유관 기관 회의 시 추진 업무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5%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중요안보위해사범 검거지수 (35%)</td><td>10.5</td><td>20(152.5%)</td></tr> <tr> <td>안보위해사범 1심 무죄율 (35%)</td><td>9.9</td><td>0(완벽달성)</td></tr> <tr> <td>대공활동안보 역량강화 (40%)</td><td>100</td><td>123.4(123.4%)</td></tr> </tbody> </table> •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모든 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특히 '18년도 안보위해사범 1심 판결 결과, 무죄사건이 단 한 건도 없어 수사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인권침해 방지 등 기대 효과가 최대치로 발휘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중요안보위해사범 검거지수 (35%)	10.5	20(152.5%)	안보위해사범 1심 무죄율 (35%)	9.9	0(완벽달성)	대공활동안보 역량강화 (40%)	100	123.4(123.4%)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중요안보위해사범 검거지수 (35%)	10.5	20(152.5%)												
안보위해사범 1심 무죄율 (35%)	9.9	0(완벽달성)												
대공활동안보 역량강화 (40%)	100	123.4(123.4%)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명실상부한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보수사의 질적 향상이 절실히 요구 되고, 또한 남북관계 변화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관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8개 과제 모두를 정상적으로 추진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1심 무죄율 0%, 대공활동 역량강화 목표치 초과 달성 등 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는 정상적으로 달성하였으나 중요안보위해사범 검거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검거건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 대책 요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차단·삭제 활동을 적극 추진, 사이버 상 안보위해요소 확산방지 기여
 - － 차단 815건·삭제 1,079건으로 목표치 대비 110% 성과 달성
- 보안사이버 디지털 포렌식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 현장지원을 80%를 달성하는 등 목표치 대비 111.6% 성과 달성
- 맞춤형·체계적 교육 실시 및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전문역량 제고
 - － △전문교육 97명 △현장교육 253명 △관리자교육 8명 교육완료, 목표치 대비 111.7% 성과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정책 효과성’ 및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항목의 점수가 저조
 - － 과제 특성상 홍보활동이 어려운 점은 공감하지만 방향성을 달리 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
-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업무 공유, 내부 소식지 배포,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 － 보안업무의 특성 상 업무성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언론보도 등 대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지 못한 점이 해당 항목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원인으로 판단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보안사이버 단속활동 지수는 920.6으로('18년 방심위 차단 815건, 삭제 1,079건) 목표치인 836 대비 110.2% 초과 달성함 •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는 57.6으로('18년 현장 지원횟수 66회, 전체 지원횟수 83회, 매체분석 200건, 포렌식 요원 31명 기준) 목표치인 51.6 대비 111.6% 초과 달성함 • 보안사이버 전문화지수는 95.6으로('18년 전문교육 97명 / 현장 교육 253명 / 관리자교육 8명 기준) 목표치인 85.6 대비 111.7% 초과 달성함 ⇒ 세 가지 지수 모두 1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는 100% 달성하였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보안4과의 대표적인 업무인 차단·삭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지표와 함께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화 지수를 선정하여 지표를 설정하는 등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다수의 평가위원들이 계획대비 관리과제가 적절하게 추진된 것으로 인정(추진계획의 준수정도 배점인 5점 기준으로 5점을 평가받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설정된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은 모두 100% 이상 초과 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일부 지적도 존재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VIP 등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행사 관련 단 한건의 위해발생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회안정 유지에 기여한 부분은 높게 평가받음
- 경호역량 강화부분의 경우 세부 추진과제를 모두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세부지표 2개 모두 목표치를 100%를 초과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평가항목중 ‘정책홍보 노력’, ‘정책환류 노력’의 경우 여타 평가항목에 비해 특히 낮은 평가점수를 기록
 - 업무 특성상 경호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평가위원의 이해를 구하는데 실패
 - 정책환류 노력의 경우, 17년 정책과제 평가 및 18년 중간평가지적사항 관련 조치를 완료하고, 매 반기별 경호행사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된 경호지침을 하달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호역량 강화 관련 객관적 역량평가체계 구축 필요
 - 그간 경호역량 강화 지표의 경우, 경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에 맞게 실시할 경우 득점하는 체계
 - 특정 역량강화 노력을 통해 경호경찰관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수 있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도입 필요
- 정책홍보 및 정책환류 평가관련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 접근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8.2/20	- 성공적 경호행사 및 경호역량 강화 지표의 경우 성과목표치는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목표도전성 '상' 등급으로 평가 - 다만, 세부 지표중 '경호역량 강화' 지표의 경우 향상 한계치에 근접하여 지표개량 필요
2. 성과지표의 적절성	13.3/15	-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포괄하고는 있으나 '경호역량 강화' 지표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 - 경호경찰관의 역량 향상도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입을 19년 주요업무에 반영
3. 추진일정의 충실성	5/5	- 세부추진과제 모두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수행 - 향후 세부과제는 외부요인에 영향이 적은 과제 위주로 선정예정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3.4/15	-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 국가적 중요행사를 변수없이 수행하는데 뒷받침하고, VIP 등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행사에서도 단 한건의 사고없이 완벽한 경호를 수행 - 다만, 경호역량 강화 노력에 따른 구체적 효과발생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정책과제 수행시 보완할 예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체류외국인·대사관 등 관련 치안불안 요소 사전 발굴, 공유
 - － 국정원 PNIO* 대상 24개 기관 중 4개 기관에 선정, 표창 수여
 - *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
- 해외 우수 치안시책 발굴·소개로 글로벌 치안정책 수립에 기여
 - ※ (사격 훈련제도) 주요국의 실질적인 훈련제도 소개, 국내 훈련제도 개선 검토
(경찰장비 개선) 장비과에서 최근 3년 해외치안정보에 실린 쏘 외국장비 구매·검토
(성범죄 피해자 지원) 캐나다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소개, 치안 R&D 사업 채택
- 외국인 테러범·간첩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구축
 - － 국내 테러단체 연루인 등 구속 22명, 불구속입건 119명, 강제퇴거 75명
 - － 인터폴 공조로 테러위험인물 대상 입국금지 조치 : 현재 16,676명
- 국제 스포츠 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지원
 - － (평창 동계올림픽) 국제경찰협력센터 운영, 대테러 등 안전활동
 - － (러시아 월드컵) 현지 국제경찰협력센터에 파견(4명), 선수·응원단·교민 보호 및 국내 신속대응팀(36명) 정비로 위기상황에 대비
 - － (인니아시안게임) 외교부 영사사무소에 파견(2명), 선수·교민 보호
- 인터폴 및 16개국 대테러 전문가를 초청한 제3회 국제대테러정보회의(ICTIC*)를 개최('18. 9. 18. ~ 20.)하여 국가별 최신 테러정보 공유

- FBI·AFP(호주 연방경찰) 등 주요국 대테러 실무 경찰관을 초청, 국가별 테러정세 및 최신 테러 기법 등을 공유하고 주제별 토론 진행

* 제3회 국제대테러정보회의(International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Conference)

○ 美 FBI 등 대테러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18. 12. 5. ~ 6.)하여 대테러 담당자를 교육, 테러정보 수집·분석 역량 향상을 도모

- 실무자 중심의 교육으로 '업무진단 및 토론' 시간을 활용하여 첩보수집 방법, 테러위험인물 관리방안 등 실증적 정보 공유

※ 美 FBI 요원 '데이비드 불렛'은 "한국경찰과 수준 높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우리에게도 더없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언급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테러 예방을 위한 외사 대테러 정보업무 전문성·체계성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존 해외사례 수집 등 단편적 수준의 예방 활동에서 탈피

- 담당자 교육, 자료 정비 등을 통해 테러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관련 기능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테러 예방 체계 확립
- '외사 대테러 정보업무 체계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예정

〈외사 대테러 정보업무 체계화 기본 추진방향〉

① 담당자 역량 강화	② 국제공조 활성화	③ 테러관련 자료정비
국내 대테러 교육 정기·상설화	IT기술에 기반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테러위험인물 정보 통합관리
국제회의 및 해외 연수 과정 내실화	실무(Working Group) 대테러 회의 개최	국내외 대테러 현황분석(정기·수시)
교육 이수제도 도입 및 전문직위 지정	대테러 협력 다각화	정보공유 활성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10%	외사정보 활용율의 목표 28.7%의 110%인 31.6%를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 정책과제인 '외사정보 및 방첩·대테러 역량 강화로 국가안정 유지'는 외사정보과의 목표 및 핵심업무와 밀접하며, 성과지표인 '외사정보 활용율'은 정책과제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다만, 내부 시스템을 통한 지표이면서 지표 달성에 따른 정책 효과를 정성적으로 부연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업무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매월 2~3개의 일정을 계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였음 - 단순 간담회·지도점검 등 위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내실있는 전문적인 교육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상	- 평창동계올림픽·아시안게임·월드컵 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 등을 테러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 국제 테러단체 등 관련인 구속 22명, 불구속 119명, 강제퇴거 75명 성과 거양 등으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에 기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부부처 최초 인권영향평가제의 성공적 도입·시행, 경찰행정 전반을 인권중심으로 재설계·제도화 기틀 마련
 - － ‘범죄수사규칙’, ‘의무경찰 관리규칙’ 등 경찰청 훈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요소 사전 제거(총 33건 완료 / 23건 진행 중)
 - ※ 2019년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할 전문 임기제 공무원 인력 4명 확보
- 국가인권위와 협업,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신속·전문적 인권보호 및 경찰권 전반에 대한 자발적 외부 통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 종로서(집회시위多), 강남서(수사민원多) 시범운영 결과, 인권침해 민원 총 48건 접수, 인권위 접수안내 8건 및 종결·해소 40건
 - ※ 2019년 전국 단위 확대·시행 방안 추진 예정
- 영화 ‘1987’의 흥행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舊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환원
 - － 환원 시기·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수많은 이견이 존재했으나 실무회의(총 11회)를 통해 의견 조율, 시민환원 완료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미흡한 점>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

2018년 성과지표	
▶ 인권영향평가 실시율(60%)	▶ 불수용 의견 회신 前 경찰청 인권위원회 타당성 검토율(40%)
$\frac{\text{인권영향평가 실시건수}}{\text{법안 상정 건수}} \times 100$	$\frac{\text{경찰청 인권위원회 사전 검토 건수}}{\text{국가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견 건수}} \times 100$

- <원인 분석> 성과지표 모두 신규지표로서, 목표치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18년도 성과 통계가 확보된 만큼 '19년도 자체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수립 시 활용,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및 달성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모든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 인권영향평가 실시율 : 목표치 33% ⇨ 달성도 35.7% - 불수용 의견 회신 前 경찰청 인권위원회 타당성 검토율 : 목표치 80% ⇨ 달성도 100%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침해 요소 사전 제거 및 권고 불수용 의견에 대한 전향적 수용이 가능하므로, 인권경찰상 구현에 적합한 지표임 - 외부 전문가 대면 컨설팅 결과, 인권보호 업무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했다는 평가였으나, 3개의 지표 중 1개의 지표를 줄여 나머지 지표에 집중할 것을 제언 - 컨설팅 제안을 수용, 제출한 지표 중 '참여형 인권교육 만족도 지표'를 제외 결정 • 법안상정건수 및 불수용 의견 건수는 피평가자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측정 통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이 매우 높음 - 인권영향평가 관련 법안상정건수는 매회 경찰위원회 회의 前·後 공문으로 통보, 국가인권위의 권고 건수는 시스템 상 확인 가능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정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월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계획을 목표한 일정 내에 정상추진함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경찰청 훈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예방,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민원에 대한 신속·전문적 해결 성과 • 인권영화제, 아카데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인권 경찰상 지속 홍보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그 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대한 동료들의 불신이 팽배한 현실 인식과 함께 부적절 감찰활동으로 촉발된 감찰의 근본적인 혁신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부응하고자
 - 금년도 감찰과 정책과제 전반을 감찰혁신과 감찰행정의 공감대 · 수용성 제고, 감찰활동의 엄격한 통제시스템 마련에 집중하며, 감찰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정책과제를 구성
- 내실있는 정책과제 수행 노력으로, ‘감찰 결과 · 처분 수용도’가 당초 목표치의 123% 초과 달성하여 경찰 징계의 수용도가 전체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
 - 아울러, 소청제기율도 59.1%에서 38.9%로 대폭 감소, 주요비위 발생건수 20.9% 감소, 전체 징계건수 45.4% 감소라는 징계처분의 수용도 향상과 비위발생의 차단이라는 양면의 가시적 성과 거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부분의 평가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 소통 및 환류, 홍보노력에서 내외부 평가위원들로부터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감찰업무의 특성 상 대외 홍보나 주요실적에 대한 적극적인 내부 공유에 있어 소극적으로 비취질 수 있는 점에 유념, 앞으로의 감찰 개혁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회복과 공감대 확보에 주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감찰 결과 · 처분 수용도</td><td>71.3</td><td>88.0(123.4%)</td></tr> </tbody> </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감찰 결과 · 처분 수용도	71.3	88.0(123.4%)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감찰 결과 · 처분 수용도	71.3	88.0(123.4%)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본 성과지표는 징계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성과 처분결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감찰활동 전반의 공감도와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도록 설계 ○ 다만, 본 지표가 감찰활동의 적정성과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일부 평가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 향후 개선 방안 도출 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정책과제 수립 시 제시한 추진일정을 모두 일정대로 완수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상	○ 성과지표 목표 초과달성을 통해 정책수혜자인 내부구성원들의 권익이 크게 증진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징계 · 소청 관련 지표 전반이 크게 개선되었음 ○ 아울러, 감찰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시선도 있었으나, 비위 발생건수와 징계건수 역시 전년 대비 개선되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킨 점에 대해 긍정 평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질적 취약분야 중심의 종합감사(4개 기관)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특정감사(10회) 등을 통해 재정투명성과 정책적합성 확보 등 안정적 치안행정 뒷받침
- 특히, 2004년 이후 14년 만에 경찰청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경찰개혁과제 이행상황 및 주요 치안정책 추진실태 점검 등 업무체계 전반 개선점 도출

<본청 감사 주요 성과 >

- (주요 치안정책) ‘현장인권상담센터’, ‘탄력순찰제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치안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 문제 발굴 및 개선안 도출
- (성과·인사) 지명수배 검거율 왜곡, 관련 업무 중단에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등 치안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장비·회계) 이동 중 수배차량 여부를 자동 판독하는 ‘멀티캠’ 장비 부적정 활용,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처리 미흡 사례 개선안 제시

※ “경찰청 자체감사에 본청도 ‘열외’ 없다...14년만에 첫 수감” - 연합뉴스(’18.9.20.)
 “경찰청 본청 14년 만에 자체감사... 개혁상황 점검” - YTN(’18.9.20.)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중 비위행위자 적발·조치실적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성과달성을 위한 무리한 감사가 우려되므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 노력 필요
- 정량적인 활동지표 외에 외부기관의 감사활동 평가결과 등 자체 감사활동의 종합적인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성과 지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감사활동 조치실적(40%)</td><td>3,248점</td><td>3,294점(101.4%)</td></tr> <tr> <td>제도개선 실적(35%)</td><td>85점</td><td>94.5점(111.1%)</td></tr> <tr> <td>감사문화 개선 실적(25%)</td><td>323점</td><td>362점(112.1%)</td></tr> </tbody> </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감사활동 조치실적(40%)	3,248점	3,294점(101.4%)	제도개선 실적(35%)	85점	94.5점(111.1%)	감사문화 개선 실적(25%)	323점	362점(112.1%)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감사활동 조치실적(40%)	3,248점	3,294점(101.4%)												
제도개선 실적(35%)	85점	94.5점(111.1%)												
감사문화 개선 실적(25%)	323점	362점(112.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고질적 비위를 근절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파급력이 큰 테마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 전개 - 비위유형별·계급별·조치별로 비위행위 예방 실적 및 재정상 조치 실적을 정량화한 '감사활동 실적'을 40% 반영 ○ 세밀한 문제진단을 통해 근원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분석적 감사 실천 - '잘못된 관행·행태 등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법령·규정·시스템 개선 실적을 정량화한 '제도개선 실적'을 35% 반영 ○ 합리적 감사를 통한 감사결과 수용도 제고 - 감사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실적과 모범사례 발굴·포상 실적을 지표화한 '감사문화 개선실적'을 25% 반영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연초 감사운영계획 수립 및 감사전문교육 실시를 비롯하여, 대구청, 전남청, 본청, 부산청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일정에 맞춰 100% 차질없이 진행하였음 ○ 특히, △ 성비위 예방·대응실태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등 시기별·주제별 특정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하였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고질적 비위를 예방하고 치안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특정감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상부서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1] 평가결과

□ 주요 성과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2018년 경찰청 SNS 친구 수 1,882,349명	1,832,332명	102.7%
·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매월 80점(월680건 이상)	매월 100점(850건 이상)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中 최초로 ‘청장님 외신 인터뷰*’를 추진하는 등 홍보 강화

* CNN(美), BBC(英), 알자지라(카타르), ZDF(獨), NBC(美) 등 주요 외신 및 국내 주요 언론 多數 보도

- ➡ 現 정부의 첫 메가 이벤트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붐업 조성 △대한민국 치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 ‘영상 보도자료’(선행 미담 등)를 언론사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온라인 홍보 활성화

- ➡ ‘2018 대한민국 SNS 대상’,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 수상

- 주요 치안정책의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주요 방송패널(15명)과 Hot-Line을 구축하는 한편, Opinion Leader 등 주요 치안고객(5,240명)을 대상으로 정기·수시로 경찰의 주요 정책 및 활동상 홍보
- 방송·영화 제작진 대상 △간담회 △투어프로그램 · 현장경찰관 강연 추진(최초),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점 추진정책에 대한 우호적 지지 여론, 공감대 확산 주력
- 특히, 경찰 드라마(라이브 · 보이스2 등) 제작 지원을 통해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드라마 ‘라이브’를 통해 “지구대 경찰관들의 밤낮없이 바쁜 일상과 노고를 현실감 있게 알게 되었다”고 평가

- ‘출입기자단-지휘부’ 간담회 개최 등 對언론 홍보 및 유대 강화
 - ➔ 특히, 출입기자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정책이슈를 사전에 적극 발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긍정 보도 견인
- 언론보도 및 온라인 이슈분석을 통해 치안정책 운영 방향 제시
 - ➔ ‘경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주요현안 시사점 도출, 지휘부 정책운영 참고자료로 제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목표치의 적극성 미흡

- 경찰청 SNS 친구 수는 '17년 말 기준 1,745,079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18년 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경찰청 대표 계정으로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워 예측 곤란
- 페이스북 이용자 대규모 탈퇴 현상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SNS 친구 수 확대 목표치 일부 수정
- 그간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SNS 친구 수를 꾸준히 확보하였으나, 페이스북 탈퇴자로 인해 다른 계정의 친구 수 증가분이 상쇄될 것을 우려했던 것임

○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 ‘공정보도’ 실적으로 인정되는 기사내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보도매체별 영향력이 다름에도 인정·불인정 매체의 기준이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튜브 등 인기 채널의 활성화

- 경찰청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튜브 채널의 친구 수를 더욱 확보하고,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블로그 기자단을 SNS 라이브 방송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실시간 소통 콘텐츠 활성화

○ ‘경찰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경찰청 SNS 및 홈페이지 설문을 통해 ‘경찰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는데 이를 계량화하여 지표화하는 방안 연구

○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 단순발생·비난보도를 제외한 △주요정책 △범인검거 △캠페인 등 경찰청 역점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사를 ‘공정보도’로 인정
- 보도매체별 영향력이 다름을 감안, 과급력이 큰 중앙지 등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실적 인정하고 지방지, 인터넷매체, 1인방송 등은 제외

※ 건수 평가 기준을 월 50건 이상 만점으로 적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7.2점 (20점 만점)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달률을 반영 안 한 것이 일부 이해되나, 친구 수 확대만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정책추진 노력도	22.4점 (25점 만점)	•정책 추진 계획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 과제의 추진 일정이 연기되는 등 더욱 노력할 필요
3. 목표 달성도	30.84점 (35점 만점)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이 조금 아쉬움
4. 정책소통 및 환류	16.6점 (20점 만점)	•정책소통 및 환류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할 필요, 경찰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치안현장 활력을 높이고, 구성원간 소통·화합 도모를 위한 행사
 - ‘제73주년 경찰의 날’ 행사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함으로써 경찰의 높은 위상과 우수한 치안역량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화합
 -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기 위해 현장경찰관 우수사례 발굴 활성화 → 「칭찬플랫폼」 운영, 폴넷 핫이슈에 공지
 - ※ 우수사례 의무할당제 도입하여 포상 의무수여기준 설정하고 신속한 포상추진
 - '18. 1월~12월까지 일일회의 개선의 일환인 ‘경바시’를 총31회 개최함으로써 치안현장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업무효율성과 직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 시책 추진
 - 전 직원 계절별 정기 휴가 실시 등 연가 일정 사전공지, 연가활성화 시책 추진 강화 → 전년도 대비 연가활용실적 13% 증가
 - 매월 마지막 수요일, 직원들의 조기퇴근을 더욱 활성화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전년 대비 10% 증가
- 청사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 하절기 청사 냉방과 동절기 온수공급을 위해 대형 냉동기·온수보일러를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직원들의 근무편의 도모
 - 본관 1층 ‘문화마당’을 직원들간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및 경찰청 내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장소로 탈바꿈
 - **시민 친화적 공간 마련**
 - 본관에 조성했던 ‘건강계단’을 북관에 추가 조성, 계단 환경개선과 승강기 에너지 절감 및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

○ 수요자 편의 중심의 공정한 회계 업무 수행

- 개선된 '19년 공공구매지표 충분히 홍보하여 일선의 수용성 확보
- 취약사항을 반영한 회계 교육 및 회계실무편람 제작

○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 노사간 협력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 간담회, 노·사 합동 워크숍 등 노사 협력프로그램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과제 대표성 및 지표설계 적정성

- 연가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원고려 또는 각 기능별 현안업무의 난이도 등을 검토치 못하여 가중치 부여 미흡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 국공노, 통공노 등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결과 어떠한 부분을 개선한 것인지에 대한 결과와 자료가 미흡하고,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의 경우 알가정 양립 정책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감축되어 초과수당이 줄어 만족도 점수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능별 업무난이도 분석을 통한 연가활용실적 가중치 부여

- 연가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지표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개선하여 기능별 현안 업무 난이도 분석을 통해 가중치 부여

○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향상 방안

-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초과근무시간의 무분별한 감축보다 허위·부당한 초과수당수령에 대한 통제 강화방안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 및 지표설계 적정성	중상	- 치안역량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 행정지원이라는 정책과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관리과제를 구성하고 있어 정책과제 대표성 및 지표설계 적정성이 우수함 - 다만 일부 성과지표가 일괄적인 계산식(연가사용일수)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 일부 미흡
2. 정책과제의 연계성	상	경찰 내부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직사회 일.가정양립 시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에 적극 동참하여 연계성이 높음
3. 추진계획 준수 정도	상	1~12월간 추진계획 100% 준수하여 목표달성
4.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중상	국공노, 통공노 등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결과 어떠한 부분을 개선한 것인지에 대한 결과와 자료가 미흡하고,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일부미흡
5. 업무 추진과정 협업도	중상	협업노력이 우수하나, 기능 특징상 타 기능과 더 유기적인 협업 관계 유지 노력이 필요
6.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중	유연근무, 연가사용일수 성과지표는 목표치보다 각각 5%, 7% 초과달성 하였으나 경무행정지원업무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를 과다 설정하는 등의 사유로 미달성
7. 정책 효과성	중상	치안역량 극대화를 위한 선제적 행정지원이라는 정책효과성은 경찰의날 행사진행.유연근무.연가사용활성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나타나 치안역량이 어떻게 극대화 됐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여 평가결과 일부미흡
8. 대내외 의견수렴	중상	73주년 경찰의날 관련 쏘 직원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여 경찰의 날 붐업을 유도하였으나, 참여인원(509명)이 적고 아이디어 내용이 빈약하거나 매년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함
9.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상	- 예년 참석인원(세종문화회관 약 3,000명)에 비하여 인원이 줄어들어 정책홍보 노력도가 미흡하나, 정형화된 식순에 구애받지 않는 現정부 기념식 트렌드에 따라 의미있는 행사진행 - 연가축진제 시행함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정책홍보 노력도 일부 미흡
10. 정책환류 노력	상	당직근무개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운영 하는 등 정책 환류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타 기능 소관 의견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해 환류 노력도가 양호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과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 순직·공상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3. 20. 공포) 및 「경찰복지법」 시행령 개정(4. 25. 시행)
 - 연속성 있는 과제 추진을 위한 경찰복지증진, 취업지원, 직장보육 시설 운영 등 '19년 복지예산 372억 원 확보(전년대비 49억원 증액)
- 복지카드기금 활용한 신규 복지사업 추진, 조직 內 복지사각지대 해소

세부사업	사업내용
장기재직자 지원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대상 2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지급
순직·공상자 지원	인사처 심의결과 순직이 인정되지 않거나 중한 공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승인을 받은 경우 재심·행정소송 지원(심급별 최대 500만원)
	순직자 유가족과 장기투병 공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공·사상 중증질환자 치료비를 지원(위험직무 순직자 1,000만원 / 공상자 1주당 14만원 지급)
	공상자 치료비 중 공무상요양비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자비 부담한 항목 50% 지원
	공상자의 원할관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인 힐링캠프 확대(연 4회→24회)
경찰법률보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피소 시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 지급(민·형사 소송 1인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유보금 사용	위 사업별 예산을 초과하는 적립금 또는 잔액 발생 시 ①대한민국 경찰유가족회 지원(연 1,000만원), ②공상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퇴직자 지원(1인당 2,000만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미흡한 점> 법령·예산·제도 등 복지기반을 대폭 확충하였으나, 실제 현장경찰관들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는 목표치에 미달
 - ※ '18년 복지만족도는 76.1점으로 목표치(76.5점)의 99% 수준
- <원인분석> 과제 추진 노력과 병행하여, 추진성과를 현장경찰관들과 공유소통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
 - ※ 기존의 복지혜택이나 개선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직원들이 현장 활력소 등에 올린 글을 보고 알게 되는 사례가 다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찰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소통·환류가 가능한 종합적인 창구를 마련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9%	•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성과지표 ①복지만족도(99%), ②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101%), ③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110%), 복지만족도 지표는 달성하지 못해 99% 달성 ※ 복지만족도 목표 미달성 원인 : 복지만족도는 반기마다 조사하는 지표로 매 조사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전년도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 그러나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보수적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저조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복지만족도는 관리과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 지표이며, 마음건강관리 실적과 취업지원 성과는 각각의 세부과제를 구체적·실질적으로 평가 가능 • 복지만족도 지표는 세부적으로는 ①보수 적정성, ②의료·여가 등 복지 프로그램 제공 수준, ③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④편의시설 관리 수준 등 경찰복지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 - 이 중 보수 적정성 문항은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타 부처의 정책적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아 자체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 존재
3.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정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월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계획을 목표한 일정 내에 정상추진함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매우우수	• 충실한 정책추진으로 건강증진체계 구축(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확대, 보훈의료공단 MOU 체결, 마음동행센터 3개소 신설), 순직·공상 예우 강화(경찰복지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 퇴직경찰관 취업지원 등 분야별로 현장경찰관들에게 영향이 큰 정책을 수행하였으므로 매우우수하다고 판단됨

[1] 평가결과

□ 주요 성과

-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찰활동 등 현장 수요에 맞도록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 (주요 법률개정) 손실보상 확대(경직법), 음주운전 형사처벌·행정처분 강화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도교법), 경찰관 의료지원 범위에 심리치료 명문화(경찰복지법) 등
- 경찰법률보험 제도 도입 및 24시간 법률전문가 상담 시스템 구축 등 현장 법률·소송지원 확대로 경찰의 법집행력·공권력 강화
-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한 성과 창출이 어려운 우리청 여건 속에도, '18년 국조실·KTV 주관하는 쏠부처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7건 선정
- 정책추진 방식·과정의 표준화 도모, '법령 및 행정규칙 등 일제정비' 추진하여 현실성 낮은 법령 등 총 73건 발굴·진행

□ 개선보안 필요사항

- 국회라는 외생적 변수가 높지만, 중점법안 통과 분위기 조성 및 치밀한 대응논리 개발을 통한 법안 통과 노력 필요
- 현장 경찰관들이 공감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활동을 전개
- 업무자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DB화된 법률상담·자문 내용의 사전 공유 및 자동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 성과지표가 이미 임계치에 도달하였고, 세부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지표를 설계하는 등 성과 창출에 도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8%	○ 성과지표 세부 항목별 목표 달성 현황 ① 법률서비스 및 법률소송지원 활동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40%) : 목표 93.4 / 달성 92.4(98%) (※ 고객만족센터 조사) ② 경찰청 국회.법령.규칙 및 지방청 규칙 담당자 만족도(30%) : 목표 93.6 / 달성 89.8(96%) (※ 고객만족센터 조사) ③ 경찰청 규제개혁 정책의 국민불편 개선 정도(30%) : 목표 7건 / 달성 7건(100%) (※ 국무조정실 우수사례 선정) ○ 연초 설정한 ①·②의 만족도의 목표치는 이미 임계치 도달. 다소 목표치에는 모자라지만, ① 지표는 목표치의 98% ② 지표는 목표치의 96%를 달성하였음 - ① 지표의 조사대상 중 2.1%만 불만족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전국의 모든 소송에 대해 경찰청 법무과에서 직접 수행·지도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인력상 한계(송무계 2명)·법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임 - ② 지표와 관련해서는 법제심사지원의 전문성과 의견 수렴·존중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신속성 분야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왔음. 이는 작년 대비 새롭게 도입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한 세심하고 정밀한 법규 심사 절차가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속성 측면이 낮게 평가되었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선제적 법규정비와 다양한 법률지원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법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수혜자들이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구성 ○ (법률서비스 및 소송지원 만족도) 현장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및 법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교육, 민.형사상 피소당한 경찰에 대한 법률구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 (국회·법제업무 만족도) 법령·규칙의 제·개정, 일제정비 및 법리 검토 등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들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만족도 평가 ○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규제개혁을 추진한 경찰청의 내부관점이 아닌 외부기관인 국조실에서 국민 체감도와 관련해서 우수한 사례를 얼마나 산정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연초부터 구체적인 추진일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연간 추진계획 로드맵을 작성하여 매월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미비점 보완하여 ⇨기한 내에 쏙 일정 추진완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권익확보를 위해 경찰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폭력집회,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회복 및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피소당한 경찰의 법률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임 ○ 정책의 수혜자는 현장 및 정책 수립수서의 경찰관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홍보의 대상은 내부 경찰관을 주요 타깃으로 법률보험 도입, 현장365(현장법률지원센터) 개소, 직무워크숍 개최, 현장근무자들의 이해·활용여부 점검을 위해 일선 경찰관서 현장방문 등 경찰관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에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재정당국의 일자리 및 복지 지출소요 확대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치안예산 증액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사업비 전년대비 4.2% 증액된 1조 9,975억원 편성
 - (인건비) 전년대비 3,169억원(3.9%) 증액된 8조 4,944억원
 - * 최근 3년간 인건비 증가율 : ('18) 4.8%, ('17) 2.8%, ('16) 5.7%
 - (기본경비) 전년대비 79억원(1.9%) 증액된 4,211억원
 - * 최근 3년 기본경비 증가율 : ('18) 1.1%, ('17) 2.5%, ('16) 0.2%
 - (사업비) 일자리 및 복지 지출소요 확대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147억원(5.9%) 증액된 2조 602억원
 - * 최근 3년 사업비 증가율 : ('18) 2.4%, ('17) 4.1%, ('16) △0.3%
- 재정사업 조기집행 적극 추진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 예산집행상황 점검체계를 운영,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
 -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일선관서 집행 애로사항 청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사업규모가 크고 집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시설, 헬기·차량, 피복) 등을 집중관리하고, 매월 대책보고, 예산집행심의회 개최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집행하였으나 목표 미달성

< 국유재산확보율 > 과제는

- 경찰관서 신축용 부지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을 적극 설득 주요 사업 부지를 최대한 반영 노력하였으나, 치안종합평가 본평가지까지 사용승인 목표 6건 중 5건을 확보하여 미달성(달성율 : 83.3%)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원활한 범집행을 지원하고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치안인프라 지속 확충
- 주요 사업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집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최근 3년간 등락하고 전년도 실적이 상당히 높게 설정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향상된 적극적·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목표 달성도는 93.3%로 목표치 93.3% 근접 달성(달성률 100%)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성과지표인 '재정지원도'는 예산의 확보 및 신속한 집행을 반영한 것으로 관리과제인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 수치로 산출가능하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재정담당관실의 중점업무인 예산확보 및 집행을 반영한 과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였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추진일정을 내실있게 구성하였으며, 과제 추진일정·지표가 논리적 연계를 이루고 있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충분한 예산확보로 경찰활동 지원과 선진국 수준의 치안인프라 확충 등 국민 만족 치안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예산·확보를 통해 국민만족 치안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였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적절한 국민안전 확보 정책 마련·시행

- 대국민 설문조사 등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스마트국민 제보’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중심의 효율적인 신고체계 마련 및 다양한 국민 불편사항 개선

▪ 교통공익 제보 처리 프로세스 **자동화** ⇨ 신속한 제보 처리 기반 마련, 업무 대폭 경감
 ▪ ‘몰카 불법촬영’,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신고 코너 개설·운영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유형 영상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 요구에 따라, ‘여성대상 폭력 범죄’ 코너 신설·운영
-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지역 등에 대해 무전망 소통권 확보 및 무전기 4,700여대 전폭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 현장 위주의 과학적 치안시스템 구축으로 범죄 대응역량 강화

- 외근경찰관이 활용하는 모바일단말기 ‘폴리폰’에 대한 신속한 범인건거 등을 위한 필수 업무기능 개발·탑재 완료(14건)
- 112통합시스템 內 노후화 된 지도프로그램을 최신 SK-T맵 지도데이터로 교체·전환하는 등 전국 현장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대응 체계 마련
- ‘수배차량검색시스템(CCTV 총 1만여대)’의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신 고화질 판독 CCTV카메라 등 교체

○ 현장중심의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체계 구축

- 경찰청 대표 내부포털 ‘통합포털 폴넷’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코너(인사소통마당, 칭찬플랫폼 등) 신설
- 경찰우편자동화시스템 內 교통행정 프로세스 개선(44건), 경찰웹팩스 시스템 기능개선(8건), 인천 무선 난청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단말기 200대)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전국 경찰관 및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업무 만족도 조사’에서 다소 미흡한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직원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신속한 피드백 체계 마련으로 만족도 향상 추진
- 홍보 관련 점수가 다소 저조, 시스템 개선사항 등 주요업무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시의적절하게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보통신 새로운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규 성과지표 마련
 - 국가적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신규 사업을 성과지표에 반영 검토 필요
- 유관부처·부서와의 협업, 대내외 홍보, 내부 의견수렴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싱	① '통합포털 폴넷' 1인당 일평균 활동건수(30%) 및 '② '스마트 국민제보' 활성화 지수(40%)는 목표치 대비 초과달성 ③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30%)는 목표치 대비 95.6% 달성 ※ 일부 정보통신 장비 보급 일정 지연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만족도 점수 목표치 대비 미달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① '통합포털 폴넷' 1인당 일평균 활동건수(30%)</td><td>4.76</td><td>100.4% (4.78)</td></tr> <tr> <td>② '스마트 국민제보' 활성화 지수(40%)</td><td>11.3</td><td>102.7% (11.6)</td></tr> <tr> <td>③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30%)</td><td>90.5</td><td>95.6% (86.5)</td></tr> </tbody> </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① '통합포털 폴넷' 1인당 일평균 활동건수(30%)	4.76	100.4% (4.78)	② '스마트 국민제보' 활성화 지수(40%)	11.3	102.7% (11.6)	③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30%)	90.5	95.6% (86.5)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① '통합포털 폴넷' 1인당 일평균 활동건수(30%)	4.76	100.4% (4.78)												
② '스마트 국민제보' 활성화 지수(40%)	11.3	102.7% (11.6)												
③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30%)	90.5	95.6% (86.5)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성과지표(3개)를 대국민 및 현장경찰관 중심으로, 신뢰성 있는 지표들로 적절하게 구성,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핵심과제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정책과제가 긴밀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면컨설팅 시 위원님들의 권고의견을 충실히 수용·반영하는 등 충실히 구성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모든 일정을 100% 일정 내 정상추진 완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정책과제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국민, 현장경찰관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 - 일평균 신고건수도 2,400여건에 이르는 등 권익위 국민신문고 시스템(1,500여건 내외)을 추월하는 등 정부 대표 신고시스템으로 자리매김 중 - 특히, '여성 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 범죄 신고 코너가 활성화 되고 있는 등 112신고가 아닌 개인폰 동영상 촬영을 통한 범죄신고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사회이슈화 되는 범죄 코너 지속 신설 검토 - 정보화시스템을 주로 활용하는 현장경찰관의 업무효율성 및 편의성 대폭 향상 (스마트국민제보) 공익신고 처리에 소요되는 민원배정, 동영상 편집 등 30만 시간 단축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차량번호자동판독기 검문소 인력 76명 감축,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 (캠코더영상편집시스템) 법규 위반차량의 영상편집 자동화로 총 1만시간 단축 (경찰우편자동화시스템) 과태료 등 87종의 경찰우편물 2,600만 건을 등기가 아닌 온라인으로 자동발송 '통합포털 폴넷'이 경찰 대표 포털시스템으로서,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상시 정책수렴 통로로 활용 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치안활동에 최적화된 스마트 순찰차 기능개선 및 확대보급(1,110대)
 - 감지된 번호판에서 자동차 번호를 정산 인식을 향상('17년 85% → '18년 90% ↑)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개발, 교통순찰차 탑재
-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드론 전자충격기 개발로 현장경찰관 및 국민안전 확보
 - 인공지능이 탑재된 실종자 수색용 드론 기체 2기구매 시범운영예정
 - 한국형 전자충격기 '18. 6월 기술평가 완료, 7월 사업종료 평가결과 '우수' 로 선정, 안전성 검증 및 도입을위한 정책연구 진행중
- 장비포털내 장비개선 토론평 운영, 현장경찰관 의견 즉시 정책에 반영
 - 현장의 개선요구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장비도입 이전 개발과정을 현장과 공유하고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토론평 운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18년 장비만족도는 76.13점으로 목표치(85) 대비 8.87점 ↓ 하락
 - ※ 장비만족도 설문은 전 경찰관 대상으로 e메일 설문(정보화장비 제외)
- 개선사항이 필요 없는 품목들은 계절과 시기에 맞게 적기 보급 완료
 - ※ 근무복 등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 36종은 적기 보급됨
- 개선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서는 장비개선 토론평 개설, 매월 보급일정 공지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불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지만

- 일체형 조끼처럼 개선 과정이 복잡하거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개선진행, 시제품제작, 시범착용 등 일련의 절차로 인해 보급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어, 개선 노력들이 만족도 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18년 개선·개발 품목 현황(23종)과 만족도 조사 시기(10.27~11.5)간 비교

만족도 조사 전 보급된 품목 (5종)	임부복, 쿨토시, 전자호루라기, 형광파카, 정복 수장
만족도 조사 후 보급중인 품목 (8종)	일체형 조끼, 제화류 4종, 흑한파카 및 내피, 손전등
'18년 시제품 개발 후 '19년 보급 예정 중인 품목 (10종)	넥워머, 귀마개, 정복외투, 장화, 여경정모, 방한모, 의경 내의류 2종, 흑서기 근무복, 기동복 벨크로 계급장 ※ 신체보호장비 5종은 제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19년에는 기존 제품과 개선 제품 모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제품을 선택한 직원이 보급시기 지연에 대해 사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보급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단가계약, MAS 등록 확대 등을 연초부터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정책과제의 대표성 및지 표설정의 적정성 1-2. 정책과제의 연계성	우수	•1-1. 대체적으로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지 표의 설계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 현장경찰관의 수요 반영한 정책과제 우수 •1-2. 국정과제, 주요업무 등에 제시한 중요과제가 정책과제를 대 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짐 연계성 등 우수
2. 정책추진 노력도 2-1. 추진계획의 준수정도 2-2. 정책과제의 수행노력도 2-3. 업무추진과정의 협업도	우수	•2-1. 대부분 항목에서 일정을 준수하였고 한국형 전자충격기 지 속개발은 근거서류 미흡하나 우수함 •2-2. 정책과제의 달성을 위한 부서의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여짐 •2-3. 업무추진 과정에서 타부처, 관련부서 등과 협업하는 정도가 우수함
3. 목표 달성도 3-1. 목표치의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3-2. 정책의 효과성	3-1 미흡 3-2 우수	•3-1. 지퍼중 장비만족도 부분은 최근 3년 실적대비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남, 만족도 항목 전반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설문시기 등에 대해 향후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검토 필요 일 부 미달성 •3-2. 치한한류의 일원으로 필리핀 등 외국 경찰에 순찰차 등 치 안장비 전시회 개최, 수출 등의 효과성 우수함
4. 정책 소통 및 환류 4-1. 대내외 의견수렴 4-2. 정책홍보노력 및 성과 4-3 정책환류 노력	우수	•4-1. 현장에서의 장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잘 수렴 하여 만족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수급바람, 꾸준한 소통으로 장비를 개선중 인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우수함 •4-2. 경찰장비의 우수성과 더불어 안전성 홍보도 부각 필요함, 홍보노력 우수함 •4-3. 대내외적으로 수렴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한 정도가 매 우 우수한 것으로 보여짐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규 과제 발굴 및 예산 반영) 연구개발 예산확보를 통해 R&D 계속과제의 내실 있는 진행과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치안 R&D 확대
 - ‘치안R&D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치안분야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치안R&D 사업의 비전·목표 및 4대 전략·12대 중점 과제를 설정
 - 「긴급구조용 위치측위 기술」 등 치안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R&D과제 3건 발굴로 '19년도 예산 186억원 확보 ('18년 대비 53억↑, 40%증액)
- (치안R&D 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경력자 등 전문가(5명)를 채용하여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신설 등 연구관 정원 증원(42⇨50명)
- (치안R&D 홍보 및 참여 확대)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치안 과학기술 연구포럼 개최, 치안시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치안 R&D 홍보 및 발전 방향 논의
 - 치안R&D 현장 지원단(현장경찰 28명) 구성, 간담회·워크숍 개최 및 R&D 과제 선정·심사 등에 참여, 치안현장에 실제 필요한 과제 발굴
- '18년 「경찰민원콜센터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87.8점으로 전년 대비 6.3점 상승하는 등 조사항목 수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 ※ '14년 78.5점 → '15년 82.3점 → '16년 83.1점 → '17년 81.5점 → '18년 87.8점

항목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전화연결 신속성	담당직원 친절성	상담내용 전문성	상담처리 신속성
'17년	81.5	82.2	86.3	80.4	82.2
'18년	87.8(6.3 ↑)	85.3(3.1 ↑)	91.5(5.2 ↑)	88.5(8.1 ↑)	90.0(7.8 ↑)

- △상담품질 평가 도입 △유공자 포상 △전문성 확보 등 그간 상담품질 관리에 힘쓴 결과, 친절성·전문성·신속성 등 평가 항목 모두 대폭 향상

▶(품질 평가) △상담관별 품질관리카드 작성 △팀별 그룹코칭 시행
 ▶(포상 확대) △친절여왕 △상담DB 개선 등 유공자 장려장 수여(月 4→7명)
 ▶(전담인력 확보) QAA·교육 등 상담품질 관리 전담인력 보강(5→7명)
 ※ QAA: Quality Assurance Analyst, 상담품질관리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18년도는 치안 R&D 사업 4년차를 맞이하고 연간 예산도 대폭증액됨에 따라 사업관리 및 성과에 집중하였으며, 향후에는 치안 R&D의 정책 효과성을 고려하여 과제의 성과지표 변경 검토 필요
 - '연구개발 예산 확충도' 지표는 치안 R&D의 확산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여 R&D 사업 도입 초기 지표로 선정한 것은 적절
 - 다만, '19년도는 치안 R&D 사업 5년차를 맞이하고, 초기에 추진한 과제의 연구 종료시점(연구성과물 도출)이 도래함에 따라 본 과제의 지표 체계 재설계 추진 예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발생하는 R&D 성과물의 사업화 방안 및 폴리스랩 연구 과제에 대한 기술남용 우려 방지책 마련 필요
- '18년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상담품질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 「182경찰민원콜센터 이용자만족도 향상 방안('18. 12. 11)」 및 「182경찰민원콜센터 상담품질 연간 분석 보고('18. 12. 27)」 수립·시행
 - 특히, 상담관 내부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사 신축 △특이민원 대응 강화 △복지예산 편성 등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성과지표로 제시된 ①연구개발 예산 확충도 ②전화민원 이용자 만족도를 각각 초과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부서의 정책목표 및 정책여건 등을 고려 할 때 「과학치안 R&D 확대와 전화민원 이용자 만족도 제고로 현장 대응역량 제고」라는 정책과제가 대표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연구개발 예산 확충도」와 「전화민원 이용자 만족도」를 선정하고 월별로 세분화하여 목표와 지표간 연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세부추진계획을 계획일정에 맞춰 정상추진 완료함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지능화, 전문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치안역량을 제고하고 연간 300만건에 이르는 민원상담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책과제에 부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과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추진 노력으로 성과지표 2개 모두 적극 목표치 설정하여 목표달성 등 전반적인 평가 우수
- 전국 경찰관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차세대 보안관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한 경찰 정보보안 역량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보화사업 체계적 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성과 다양한 분야와 협업 활동을 하였으나 조직내부 협업이 다소 미흡
 - 정보화사업 총괄부서 특성상 외부에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 구축 시 예비타당성 검토, 중복사업 예방, 예산 절감 효과 및 사업 진척 현황 모니터링으로 조기발주 유도 등 성공적인 사업수행 지원 효과
- 직무전문화 교육의 커리큘럼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과정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 운영을 내실화하여 국·관별 '19년 주요 정보화 사업의 조기집행 및 사업 일정별 관리를 강화
- 정보화사업 부서와 3C 협업 강화하고 핵심 전략과제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치안분야 적용과제 적극 발굴
- 직무 전문화 교육의 과정에 대해 실전 해킹공격 방어 교육 추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정책과제 대표성 및 지표 설계 적정성	우수	• 대체적으로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표설계도 정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여짐. • 효율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마련 성과지표 점수를 7점으로 상향한 근거 또는 필요성 설명 필요
1-2. 정책과제의 연계성	우수	• 정책과제의 연계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우수한 것 같음. • 국정과제, 주요업무계획 등에 지시된 중요과제가 정책과제에 대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짐.
2-1. 추진계획 준수 정도	100%	• 추진계획 잘 된 것 같음.
2-2.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보여짐 •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활동 노력 우수.
2-3. 업무 추진과정 협업도	우수	•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안업체, 대외기관 등과의 협업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짐. •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업 활동을 하였으나 조직 내 협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S	• 2개 과제 모두 목표치는 적극적으로 설정하였고, 1개 과제는 목표달성도가 110%이나, 1개 과제는 110%가 되지 않아 19점 부여함 • 전년도에 비해 평가 점수가 향상되어 우수함.
3-2. 정책 효과성	우수	• 치안데이터맵 등의 활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담당자 등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됨. • 대체적으로 정책과제 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구체적 효과성 설명이 미흡함.
4-1. 대내외 의견수렴	우수	• 보다 성공적인 과제 운영을 위해서는 통상적 수준의 의견수렴을 넘어서는 노력이 요구됨,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의견수렴 대상을 넓힐 것을 권유함. • 정책과제와 관련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운용 및 연관성 있는 타 기능과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보임.
4-2.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정책홍보 실행을 위한 노력이 대체적으로 양호함. • 경찰 전산망 보호 및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전 경찰관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4-3. 정책환류 노력	우수	• 대내.외에서 수렴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한 정도가 매우우수함. • 경찰 전산망 보호 및 정보시스템 사용의 편의성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헬기 안전운항 역량 강화로 25년 무사고 안전비행 유지
 - 7.17. 해병대 ‘마린온’헬기 추락사고 등 '18년 헬기 3대 사고로 사망 6명 발생, 최근 9년간 27건 45명 사망

- (민생치안) 수사, 실종자수색, 응급환자 이송 등 681회

구 분	계	수 사	실 종 자 수 색	환자이송	변사자 이송	교통지원
'17년	642회	9회	191회	19회	14회	409회
'18년	681회	12회	223회	29회	19회	398회

- 피의자 긴급호송, 실종자 공중수색, 도서·산악지역 환자이송, 변사자 인양·이송, 교통관리 등 지원(전년대비 39회<6%> 증가)

- (경비작전) 테러, 경비·경호 공중작전 지원 등 306회

- 평창 동계 올림픽 테러발생 대비 현장정찰·상황관리, 주요행사 경비·경호작전 등 지원(전년대비 57회<16%> 감소)

- (현장점검) 국가 재난지역 방문, 주·야간 치안활동 점검 등 146회

- 지휘부 재난지역 답사, 치안현장점검 등(전년대비 23회<19%> 증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과제 중 지표설계(13점), 성과달성도(16점), 정책 효과성(13점)으로 전반적인 감점요인 발생,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쇄신 필요
- 일선 치안현장에서 쉽게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등 디테일한 헬기 지원 전략 수립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미흡	○ 치안현장 헬기지원(40%)은 해병대 헬기추락사고로 인한 중형급 헬기 4대 운항정지로 인한 목표치 미달성으로 감점요인 발생 ⇒ 정비에 중요성과 관할 불문 타지방청 헬기지원 방안 적극 반영 ○ 무사고 안전비행은 정기검사를 추가한 헬기 운항의 최우선 조건인 안전운항을 지표로 설정 만족할 만한 성과달성 ○ 적극적 정비노력은 해병대 헬기사고 여파로 참수리 4대 정비 미완료에서 최종 12.31. 운항 재개와 동시에 정비완료 ⇒ 연말 정비중인 헬기는 해를 넘기지 않도록 디테일한 정비일정 관리로 한 번의 실수가 국민의 신뢰성을 저해 할 수 있음을 주지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 치안현장 헬기 지원율을 목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 ⇒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득이하게 목표치 미달성 할 수 있음을 감안, 무한 목표설정 보다 안전을 최우선한 목표치 재설정 필요 ○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고정적인 감항성 검사 외에 정기검사를 추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보완 ⇒ 무사고 안전비행 및 정기검사를 추가 지표로 꾸준히 관리필요 ○ 헬기의 고장 원인과 신속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병대 헬기 사고로 인한 부득이한 정비 미완료 요인이 감점요인으로 발생 ⇒ 20년 이상 노후헬기(52%)와 기종이 다른 8종의 헬기를 신속, 정확, 안전하게 정비하여 목표달성, 향후 적극적인 정비노력 지속 추진필요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평가 매뉴얼 상 추진계획을 모두 기한 내 추진하였으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위해 매월 2건으로 단축필요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가용 헬기를 최대한 지원, 국제행사에 적극동참 최신 헬기장비(항공 카메라) 활성화 ○ 헬기운용 기관 중 유일하게 25년 무사고 안전비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안정된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정책과제 집중관리 △현장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추진
 - 치안력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추진 및 증원인력의 94.7%(2,057명 중 1,948명)를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치안 분야의 집중 배치
 - 국민의 체감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13개의 핵심과제의 성과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 △예산·입법지원 등 정책관리
- ➔ 치안행정 서비스의 직접고객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안전도 설문조사에서 '11년 체감안전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점(73.3점) 달성
-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인 경찰개혁 추진
 - △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보·보안경찰 개혁 경찰개혁 과제 추진으로 경찰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권 행사의 근거·한계 명확화
- ➔ 제73주년 경찰의 날 대통령 치사에서 경찰개혁 추진사항에 대한 격려

대통령 치사 중

중략... 경찰은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330개의 세부개혁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실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중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치안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책홍보 성과에 있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대외 홍보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정책환류 노력) 연간 진행되는 성과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 개선·반영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과제 성과지표 중 국정과제 등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는 他 기능 치안정책의 중요도를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여 설계 필요

* 국정과제 수행 및 주요업무계획 총괄 부서로서 △ 국정과제(9개) △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상 핵심지표 등 총 13개 성과지표를 정책과제 지표로 선정·관리

- 인력 증원·재배치 지표는 기재부·행안부 등 협업이 필요하고 예산과 관련된 지표로 외생변수 따른 목표달성에 영향 있어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 국정과제 등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 인력 증원 △ 인력 재배치 3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 달성 <table><tr><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tr><td>▶ '18년 국정과제 등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60%)</td><td>77%</td><td>84.6% (110% 초과달성)</td></tr><tr><td>▶ 인력 증원(20%)</td><td>2,000명</td><td>2,057명 (103% 초과달성)</td></tr><tr><td>▶ 인력 재배치(20%)</td><td>500명</td><td>878명 (176% 초과달성)</td></tr></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18년 국정과제 등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60%)	77%	84.6% (110% 초과달성)	▶ 인력 증원(20%)	2,000명	2,057명 (103% 초과달성)	▶ 인력 재배치(20%)	500명	878명 (176% 초과달성)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18년 국정과제 등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60%)	77%	84.6% (110% 초과달성)												
▶ 인력 증원(20%)	2,000명	2,057명 (103% 초과달성)												
▶ 인력 재배치(20%)	500명	878명 (176% 초과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 국정과제 등 등 민생치안·경찰개혁과 직결되는 핵심정책과제를 선정, 목표관리를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 경찰청 조직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지표설계로 실질적인 체감 성과 창출 견인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 뒷받침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전반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정부·국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대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큼에도 외부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당초 계획되어 있던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정책추진 완료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매우우수	• 국민의 체감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13개의 핵심과제의 성과 달성을 위해 △ 성과관리 △ 예산·입법지원 등 정책관리를 실시한 결과 세부지표 등이 대폭 개선 < 민생치안 분야 주요 정책과제 관련 지표 개선 현황 > <table><tr><td>▶ (112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17년 : 6분 14초 → '18년 6월 : 6분 1초</td></tr><tr><td>▶ (4대 강력범죄 검거율) '17년 : 78% → '18년 6월 : 80.0%</td></tr><tr><td>▶ (교통사고 사망자) '17년 자동차 1만대 당 1.6명 → '18년 6월 자동차 1만대 1.3명</td></tr></table>	▶ (112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17년 : 6분 14초 → '18년 6월 : 6분 1초	▶ (4대 강력범죄 검거율) '17년 : 78% → '18년 6월 : 80.0%	▶ (교통사고 사망자) '17년 자동차 1만대 당 1.6명 → '18년 6월 자동차 1만대 1.3명									
▶ (112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17년 : 6분 14초 → '18년 6월 : 6분 1초														
▶ (4대 강력범죄 검거율) '17년 : 78% → '18년 6월 : 80.0%														
▶ (교통사고 사망자) '17년 자동차 1만대 당 1.6명 → '18년 6월 자동차 1만대 1.3명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인사 직무만족도>

-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정의 실현, 내부 수용도·공감도 제고
 - － 현장정책 자문단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인사제도 개선 시 반영
 - － 개개인 인사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만족도 향상
 - ※ △장기교류대상자에 대한 전보 확대 △업무대행제도 활성화 등

○ 업무유공자에 대한 공정한 포상

- － 표창 및 특별승진 공적 기술서 작성시 분야별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전 경찰관서의 포상 수여 균질성 확보

<전문 직위>

- 전문직위 운영을 위한 예산 대폭 증액, 공직 전문성 강화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17년 10억 → '18년 33억)
- 전문직위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 전문직위 선정요건 등을 명확구체화 한 '경찰공무원 전문직위제 운영 지침' 마련

<임기제 공무원 증원>

- 전문지식을 요구하거나 경찰관이 수행 중인 업무 중 행정·지원 분야를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경찰관을 치안현장으로 배치, 현장치안력 강화에 기여

□ 미흡 원인분석 및 보완필요

- 과감한 인사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요구하는 기대가 커 직무만족도 향상에 애로
- 현장정책자문단, 현장활력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 － ‘인사제도개혁 TF’를 통해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5%	• 전문직위 운영은 적극적으로 전문직위를 발굴하여 목표치 116% 달성하였고 임기제 공무원 증원 목표치를 107.9% 달성하였으나 • 직무만족도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나 목표치에는 미달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 공정·투명한 인사정책 운영으로 내부만족도 향상 △ 경찰관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 △ 일자리 창출로 일선 치안현장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로 구성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인사운영은 개인별 이해관계가 달라 여타 업무보다 추진에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따라 충실히 과업 수행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인사제도의 과감한 개혁과 더불어 직원들의 손톱 밑 가시 같은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만족도 제고 • 경찰관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일과 가정이 균형 잡힌 생활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정책 추진

- (채용분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변경·35개 경력채용분야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정책 추진
- (교육기관) 4대 교육기관 업무조정 및 교육기관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고 경찰대학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 추진
- (교육피로도 개선) 현장순회교육 집체교육방법 개선, 교육업무 안내서 제작·배포 등 현장경찰관들의 교육환경 개선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교육피로도 개선 미흡)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경찰관들을 만족시킬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 (콘텐츠 다양화) 교육기관 교육·사이버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나, 직무분야 외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 발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방청 대상 성과평가지표와 무도훈련·사격 개선 등 조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중(19년 시행)
- 2019년에는 보다 지방청별 채용설명회 개최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노력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우수	○ 사이버콘텐츠 현장 활용도와 현장순회교육 이수율의 목표 달성위해 노력함.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고 달성도도 매우 우수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100%	○ (①사이버콘텐츠 현장 활용도) 목표치(89.6)을 상회하는 실적(93)으로 '초과달성'의 성과를 도출 ○ (②현장순회교육 이수율) 목표치(90.9)을 상회하는 실적(91.4)으로 '초과달성'의 성과를 도출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일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업무 추진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직무전문성 제고 및 자기주도 학습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과제 내용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선발', '현장경찰관 직무 전문성 강화', '자기 주도학습 기반 조성' 등을 전개 ○ 전국 권역별 교육담당자 워크숍 개최, 경찰청 현장학습모임 적극 지원, 동료강사 강의 경진대회 및 시니어선발, 경찰행정분야 경력경쟁제도 개선을 위한 경찰학, 범죄학회 간담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 등 수행 ○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 ○ 채용 관련 적극적인 외부홍보로 수험생 불편 최소화와 동시에 내부 직원 대상 교육관련 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편의성을 도모한 사실이 인정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치안정책 · 이슈 선제적으로 진단 ⇨ 빈틈없는 치안 확립 일조

- ▶ <수사구조개혁> 권력기관 개혁방안('18. 1. 14) 및 수사권조정 정부안('18. 6. 21) 발표 시 주요시점에 대응기조 등 보고 ⇨ 추진전략 등 반영
- ▶ <소방청 협업 강화> 경찰청장 소방청 방문 · 간담회를 계기로 경찰-소방 간 협력 강화 방안 검토 ⇨ '재난현장 공조체계 활성화' 등 협력 강화

○ 국민안전과 정책 사각지대에 역량 집중 ⇨ 사회안전망 강화

- ▶ <밀양 화재 사고> 사고 관련 병원들의 화재관리 대비 실태 진단 및 종합적인 안전진단 제언('18. 1월), 이후 '범정부 합동 대책('18. 2월)'에 주요 내용 반영 ⇨ 화재안전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성과 달성
- ▶ <구제역 예방> 김포 구제역 발병(4. 1) 이후 강화도 등 인근지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봄축제가 예정되어 있지만, 소독 조치 등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 전파(4. 13) ⇨ 구제역 확산 조기 차단 기여
- ▶ <재활용품 수거 대란> 환경부의 플라스틱 수거 업무 정상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거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실태 종합 진단('18. 4. 2) ⇨ 환경부 조속한 후속대책 및 현장점검 실시

○ 비위·부패 등 고가치 범죄철폐 발굴 ⇨ 공정사회 구현 기여

※ 채용비리 · 사회지도층 비리 · 공공기관 비리 등 발굴(구체적 내용은 보안사항)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다각적인 내부 공감대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치안정책 홍보 지원 활동도 강화했지만, 정보업무 특성상 홍보에 한계가 있음
- 정보경찰 개혁에 따른 '업무 시스템 · 정보관 개개인의 혁신'을 추진 하면서 흔들림 없는 정책정보 역량을 유지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목표치를 모두 10% 이상 초과달성 ⇨ 최우수 등급 달성 • 자의적으로 평가된다는 지적이 있던 '대외 전파 보고서 활용도' 비중을 축소('17년 21% → '18년 10%), 평가의 공정성 제고 • △ 6.13 지방선거 △ 부정부패 척결 기조 등 고가치 범죄 첩보 중요성이 높았던 시기에 목표치를 달성하며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와 범죄 근절이라는 경찰목표 달성에 기여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정책정보 대내 활용도</td><td>994점</td><td>1,095점</td></tr> <tr> <td>정책정보 대외 활용도</td><td>756점</td><td>839점</td></tr> <tr> <td>범죄첩보 활용도(20%)</td><td>16.8%</td><td>18.53%</td></tr> </tbody> </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정책정보 대내 활용도	994점	1,095점	정책정보 대외 활용도	756점	839점	범죄첩보 활용도(20%)	16.8%	18.53%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정책정보 대내 활용도	994점	1,095점												
정책정보 대외 활용도	756점	839점												
범죄첩보 활용도(20%)	16.8%	18.53%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치안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찰 내부 대상 정책정보'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성과 평가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국정 과제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범죄첩보 비중도 상향 • 정책자료의 작성·활용을 통해 정책과제 목표를 달성하는 업무 구조 ⇨ '작성·배포·활용'의 정책정보 수 단계를 평가하는 만큼,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서 포괄적으로 설계												
3.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 수 계획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완료 / 계획들이 구체적이고 추진일정도 목표 달성에 효율적으로 지정, 이행실적도 명확 ⇨ 평가결과 전 위원 5점 만점으로 평가												
4.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수사구조개혁 등 경찰 핵심 추진과제의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치안정책 점검 및 경찰청장 보좌로 국민안전·치안 고도화 견인 • 고가치 범죄첩보를 발굴하여, 채용비리·불법선거 사범 등 부정부패 근절 ⇨ 국정과제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 • 치안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비점·국민불만 등 점검, 정책 효과 제고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	○ 탄력순찰 이행도 현장부담 완화	○ 탄력순찰 개선계획 시행('18. 7월), 접수방식 개선, 경로안내시스템 개발 등 부담 최소화 노력
	○ CPTED사업 지표명 변경 및 평가기준 마련	○ '공동체 범죄예방노력→CPTED사업 노력' 지표명 변경 및 △경찰 제안·참여 △예산 100만원↑ 등 기준설정('18. 4월)
	○ 빅데이터 분석 통해 지표 추가발굴	○ 범죄분석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18. 12월), '19년 범죄분석기능 고도화 추진
	○ 공동체치안 개념 정립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공동체치안 설명자료, 탄력순찰 영상홍보 등 배포('18. 7월) ○ '19년 탄력순찰 대국민 홍보 수요조사('18. 12월)
2	○ 피해품 회수건수를 전체 강·절도 발생 건수대비 회수사건 비율로 조정 검토	○ '19년 자체평가 정책과제 수립 시 검토('19.4월) - 강·절도 발생 대비, 피해품 회수건수 비율이 일정 수준 도달 시까지 회수건수로 관리할 예정이었으며, - '18년말 기준 통계 분석 후, 개선여부 최종 결정
	○ 실종사건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형사기능의 적극적 역할 부여	○ '19년 실종수사업무 형사기능 이관 예정('19.2월) - 범죄관련성 분석 및 초기 경찰력 집중 투입 등 보다 전문성 있는 대응 예정 ※ 여청 실종인력 553명 형사기능 재배치 예정
3	○ 사이버수사 성과지표를 세분화하고, 관련 통계 집중 관리	○ 정책과제 지표 설정 시 사이버범죄 검거율 외에 다양한 수사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 ('19. 2월)
		○ 매월 성과분석회의 개최, 관련통계 지속 점검('19. 2월)
4	○ 집회시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활용 필요	○ 집회시위 문화와 경찰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19년 집회시위 대응 지침 수립 시 활용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 핵심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 추진
	○ '집회시위 1천 건당 경찰부대 수' 성과지표 개선 필요 <개선 필요사항> - 개별 집회시위마다 경찰부대 배치 기준인 △참가인원 △개최장소 위험성 △참가자들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이 상이하므로, 경찰부대가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집회시위와 일반 집회시위 구분 필요 - '집회시위 건수 통계'를 지표에 반영하는 경우 각 집회시위 특성에 따른 가중치 부여 등 개별 집회시위 특성을 수치화하여 반영해야 함	▶아래 요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집회시위 건 수에 가중치(×2) 부여, 통계 산정의 공정성 담보 ※ ①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 ② 개최장소 특성 상 경찰부대 다수 배치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참가자들의 불법행위 및 충돌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5	○ 집단민원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	○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19.6월限)
		○ 대응 매뉴얼 개선에 맞춰 FTX 등 실시('19년.10월限)

6	○ 홍보 노력 강화	○ 보도자료 활성화 및 오보 등에 대해 적극 대응 예정('19년)
	○ 여론조사 현실화	○ 집회 참가·피해 등 경험자 참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집회시위 장소 인근 정류장·주택가·상가·사무실 등에서 면접원이 직접 현지에 진출하여 대면 조사, 지속 유지('19년)
7	○ 규칙·법률개정은 선행절차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향후 지속 추진 필요	○ (경직법)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 제출 계획('19.10月 限) ○ (집시법) 정책연구용역 결과('19.1月 限)를 토대로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19.10月 限) ○ (정보경찰 활동규칙) 인6권영향 평가 완료 ('18.12.28) 후 법무과 심사를 거쳐 경찰위원회 상정 목표('19.6月 限)
8	○ 그간 시행한 각종 개혁과제·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 필요	○ 현장점검, 교육, 간담회 등 지속 실시, 완전한 현장 정착 유도 ('19년 중)
	○ 수사경찰 교육 관련 '종합 개선계획' 이행을 위해 교육기관과 세부내용 협의 필요	○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세부적인 내용 협의('19. 3월 限) ○ 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수사경찰 교육 개선 지속 추진(연간)
9	○ 1회성·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활동방안 수립 필요	○ 내부망 폴넷에 개설한 수사구조개혁 전용 게시판인 「수사 구조개혁 바로알기」를 전폭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19.1월) ○ 전략적·정책적으로 홍보활동을 다변화하여 홍보효과 제고 및 국민여론 결집 기대('19.1월)
	○ 수사구조개혁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제시 되지 못한 한계	○ 국회 사개특위 등 논의를 뒷받침하는 대내외 활동 체계화·고도화 -수학단 내부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확립하고 전종하게 함으로써 업무역량·효율 극대화 ※수학1팀은 검토자료 작성 / 수학2팀은 대외 업무협의 / 제도팀은 대내 개혁방안 수립·시범운영
10	○ 성과지표 적극성과 목표달성도 향상 필요	○ 성과 관련 분석회의 실시('19. 2월)
		○ 현장만족도 관련 현장의견 청취(간담회, 설문조사 등) 및 개선방안 마련·추진('19. 3월)
11	○ 적극적인 과학수사 대외 홍보활동 필요	○ 과학수사 토크 콘서트, 대국민 기법장바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참여 프로그램 개최 계획 수립('19.4월)
		○ 언론기자 대상 과학수사 체험학교 개최, 주요정책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 홍보(연중)
12	○ 디지털증거분석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은 연 233.3건(한림대 연구용역, '15년)이나 현재 1인당 414.6건 수행, 업무량 과다	○ 정원재배치를 통한 분석관 증원 및 선발('19. 2월)
	○ 디지털증거의 특성상 비전문가에 의한 증거 수집·확보시 멸실·훼손 등 우려 ○ 디지털증거 수집·분석·관리 등의 전 과정을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現 인력·조직으로는 한계, 현재는 분석요원이 순번제로 현장지원을 담당	○ 디지털증거분석 수요가 많은 서울청 대상 현장대응 전문요원 시범 운영('19. 6월)

13	○ '다문화 치안활동 활성화' 지표 측정산식 가중치에 대한 근거 부족	○ '다문화 치안활동 활성화' 지표의 활동별 가중치를 실제 업무의 중요도 및 타 기능과의 협업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19.3월)
	○ 대내외 의견수렴 미흡	○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폭 넓게 수렴('19.10월)
14	○ 아시아권 협력범위를 국제기구 및 미주유럽 등 지역으로 확대	○ EUROPOL, INTERPOL, UNDP 공동 협력사업 발굴(연중)
	○ 국내기업 수출지원, 재외국민 치안만족도 조사 등 정책과제 효과성 제고	○ 재외국민 치안만족도 조사 대상 확대(하반기) (5개국 500명 ⇒ 10개국 1000명) ○ 경찰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OU 체결(하반기)
15	○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환류 확대 필요	○ 경찰청·사감위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사이버도박 근절 협의체 구성('18. 12.)
		○ 누리캡스 인원 확대(839명→1,000명, 20%↑)('19. 4.)
16	○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 안정적 정착	○ 수사관 대상 권역별 실습위주 사전교육 ('19.3월)
		○ 사례 추가, 외국인 특성에 맞는 모델 제작 등 수정·보완 ('19.12월)
	○ 경찰의 성폭력 대응과정상 △피해자 책임 전가 △인식부족 △가해자 동조 등 부적절 언행 사례 발생	○ 재발 방지를 위한 여청수사 사례별 교육(연중) ○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 민간전문가와 사례회의 개최, 피해자 친화적 수사 유도(분기별) ○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등으로 수사과오 사전 차단(연중)
17	○ 자체선도프로그램 개선 필요	○ 자체선도프로그램 운영 시 본청 승인절차 신설 ○ 자체선도 표준모델 개발 ○ 전문가참여제·선도프로그램 병행실시(소요기간 단축) ○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개인상담 확대 ○ 소집단·초범 중심 선도프로그램 운영
	○ 형사절차에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아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점 개선 필요	○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 시범운영 추진('19년) * 가·피해자의 자발적 참여로 피해회복·갈등해소를 유도하는 사법 이론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18	○ 가정폭력 신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현장종결 처리하는 관행 문제	○ 한층 강화된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표준대응모델*」 수립·추진(상반기) * 112 신고 이력 관리 강화, 위험성 조사표 개선, 중대 가정폭력사범(흥기소지 등) 구속수사 원칙 등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즉시적인 강제제재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한계	○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案)*」에 따른 법개정 추진(20대 국회 임기 內) * 정부대책 中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사항 ①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해자 '유치장 유치' 조항 신설 ②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③응급조치에 현행법 체포 추가 등

19	○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협력기관 발굴 및 협업(6월)
	○ 범피기금 집행체계 개선 추진	○ 범피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련 의견 개진(5월) ○ 기재부, 국회 등 대상으로 개선필요 근거 설명(10월)
20	○ ACS시스템 활용 성매매알선자와 성 구매자간 통화차단을 위해서는 통신요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으므로 성매매방지를 위해 예산배정 필요	○ 2020년 예산요구서 제출('19.1월)
	○ 지방청 풍속수사팀 정원확보가 안돼 현원으로 운영중이고, 불법풍속업소 증가 대비 단속인력은 현저히 부족함	○ 2020년 풍속수사팀 정원 반영 요청 ('19년 상반기)
21	○ 다른 공항에도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추가 개소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해공항 등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추가개소 검토('19. 6월)
	○ 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필요	○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19. 12월)
22	○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협업	○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MOU체결 등 추진(연중)
	○ 시설규제 개선 노력도 수정	○交通安全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19.4월)
23	○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 고속도로에 대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현장단속 강화('19년 연중)
	○ 화물, 특수 차량 사망자 증가	○ 매월 유관기관 합동 정비불량, 과적 단속 등 안전관리 주력('19년 연중)
24	○ 성과지표 목표치 도전적 설정	○ '19년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19년 1분기)
	○ 법령개정·제도개선 사항 성과지표 설정	○ '19년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19년 1분기)
25	○ 정책과제 수립시 예상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외국인 밀집지역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Geo-pros 외국인범죄 Tab 정식 운영(3월), △법무부 협의, 생체 인식 모바일 신원확인 시스템 운영 협의(11월) ○ 산업보안협의회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간담회 참여(12월) ○ 인터폴 총재를 경찰청 대표 브랜드로 활용, 인터폴 주요 프로젝트 국내 유치 등 대한민국 경찰 위상제고(10월)
26	○ (지표 개선 추진) 성과 지표 중 하나인 경찰 작전부대 역량 강화도 산출 방식에 대해서 現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시율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교육훈련 성적 반영 필요	○ 성과 지표 개선을 위해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등 실시('19년도 상반기 限)
		○ 성과 지표 개선안 제작('19년도 하반기 限)

27	○ 장기적 관점에서 경찰 테러대응 역량과 활동 및 그에 따른 국민안전 향상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성과지표 설정 필요	○ 실제 상황·경찰의 현장활동·국민체감 안전과 연계된 성과지표로 개선 예정 ※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폭파협박, 의심물 발견 신고에 대한 신고자·시설관계자 등 대상 경찰의 실제 사건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 조사예정
	○ 지역단위 대테러 협조체계 구축	○ 경찰 주도 관계기관 참여하는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지역 협의체'를 신설하고 활성화 하여 DB구축 등 예정 ※ '18.12월 기준 8개 지방청 신설완료, 여타 지방청은 '19.1월 중 신설계획
28	○보안경찰 개혁방안 내용취지에 따라 안보수사 본부 신설 준비 등 향후 보안경찰 역량 강화(전문교육 확대 등) 추진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등 필요	○ 전국 경찰관서 보안과장 워크숍 개최('19.2월) ○적극적 현장의견 수렴 거쳐, '19년 정책과제 설정('19.3월) ※ 지방청 성과지표와 연계 등 현장공감대추진동력 확보
	○탈북민 신변보호지침을 개선(개정)하여 현장의 인권친화도를 높이는 등 본청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개선 노력을 병행 필요	○ 전국 신규전입 탈북민 신변보호관 워크숍 실시('19.2~3월) ○ 탈북민 신변보호지침 개정(인권보호 의무조항 신설 등), 인권 친화적 신변보호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9년 상반기)
29	○ 보안국 추진업무에 대한 홍보 개선이 필요	○ △주요 판례에 따른 교육 자료 배포 △ 우수 수사사례 공유 등 내부 홍보 강화(수시 추진) ○ 전략물자사범 주요 수사사례를 전략물자관리원,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기업 교육자료로 활용('19. 6월)
	○ 정성평가 결과 측정 시 '전년 대비 개선도', '목표 값 대비 실적' 등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계별 업무분장에 따른 지표 개선안 마련, 평가비중 조정 등 반영하여 '19년 보안2과 정책과제 수립('19.2월) ○ 내사일몰제, 이적표현물 감정방법 개선 등 새로 시행된 정책의 성과를 객관화된 수치를 토대로 분석하여 성과평가결과보고서에 반영('19. 10월)
30	○ 추진업무에 대한 홍보활동 개선 필요	○ (대내) 현장토론회, 현장 직무 교육 등 실시할 경우 △ 업무별 주요 성과 △ 최근 동향 자료 △ 우수 사례 공유 등 업무 홍보 (상시) ○ (대외) 방통위·방심위 등 유관기관 대상 업무 홍보를 추진하고 자문위원단 등 외부 민간전문가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병행 (상시)
	○ 대내·외 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표 설정 필요	○ 조직·업무 변경에 따라 개선된 사무분장에 따른 지표 개선안 마련, '19년 보안4과 정책과제 수립('19.3월)
31	○ 정책홍보 및 환류 노력 강화	○전국 경호경찰관 워크숍 개최(3월) ○경호행사 분석평가 및 경호지침 마련·배포(매반기)
	○ 경호역량 향상도 측정체계 구축	○경호 전문화 교육에 따른 경호경찰관 역량 향상도를 측정·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구축(11월)
32	○ 정보수요자의 범위를 수직·일방향에서 수평·양방향으로 확장 필요	○ 적정 주제 선정 후 폴넷 '외사 국관마당' 자료방에 게시
	○ 테러 예방 관련 기존 해외사례 수집 등 단편적 수준의 활동	○ '외사 대테러 정보업무 체계화' 종합계획 수립·추진('19년)
33	○ 인권영향평가제의 고도화	○ 전문임기제 공무원 부임, 인권영향평가의 평가기간 단축 및 실시율 제고('19.5월)
	○ 전년도 통계치에 근거한 적극적인 성과 지표 목표치 설정	○ 관리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확정('19.4월)

34	○ 감찰업무의 주요 변화내용을 규정화하여 지속가능한 감찰개혁 담보 필요	○ 경찰 감찰규칙 개정 추진(19.4월) ※ 19.2월 중 경찰개혁위 상정 예정
35	○ 비위자 적발·조치실적보다는 감사활동의 종합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필요	○ 감사담당자 및 내부직원 의견수렴 하여 지표 개선 ('19.1월)
36	○ 정책소통 및 환류 노력 필요 ○ 실제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제 선정	○ 경찰청 SNS 라이브 방송 활성화(연중 추진) ○ '경찰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분석·피드백('19년)
37	○ 경찰의날 관련 국·관별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초청내빈 명단을 취합하였으나, 청장님 방문 기관 또는 MOU체결 기관 등이 누락되어 추가로 초청하는 사례 발생	○ 내빈초청 기준마련 ('19.10월)
	○ 쏘 직원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여 경찰의 날 붐업을 유도하였으나, 참여 인원(509명)이 적고 아이디어 내용이 빈약하거나 매년 중복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함	○ 아이디어 공모전 폐지검토 및 별도 붐업 콘텐츠 개발('19.10월)
	○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초과근무시간의 무분별한 감축보다 허위·부당한 초과수당수령에 대한 통제 강화방안 검토	○ 초과근무수당 다액 수령자 점검 및 운영실태점검(연중)
38	○ '경찰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국정과제와 연계, '합리적 보수체계 조정' 지속 추진하여 복지만족도 점수 향상 ○ 순직·공상경찰관 예우 및 지원 강화	○ 전반적인 보수 수준을 결정짓는 기본급을公安직 수준으로 조정('19년 지속 추진) ○ 순직·전몰경찰관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추모행사 실질화('19. 10월) - 보훈단체와 협조, 경찰 추모주간에 대규모 추모행사 개최 - 국방부 유해발굴사업단과 협업, 경찰격전지 발굴 ○ 순직·공상 경찰관 및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확충('19. 6월) - 본청 차원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체계적 순직·공상 현황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3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성과 지표 개발 및 목표치 개선	○ 지방청 등 의견수렴 후 성과지표 개발('19.3월)
40	○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사업 발굴 등 치안인프라 지속 확충	○ 중기사업계획 수립('19.1월) ○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19. 4월)
	○ 재정사업 적극적 집행 관리로 경제 활성화 지속 지원	○ 지속적 집행부진 사업 집행현장조사 실시('19. 4월)
41	○ 정보화 핵심사업을 성과지표에 충실히 반영	○ 신규 성과지표 검토, 마련(3월 중)
	○ 스마트국민제보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 필요	○ 스마트국민제보 설문조사 실시 및 2019년 추진계획 수립(5월)

42	○ '18년 장비만족도는 76.13점으로 목표치(85) 대비 8.87점 ↓ 하락 으로 설문시기 등에 대해 향후 조정 필요	○ 장비만족도 설문시기는 주요장비의 개선·개발완료 시점인 10월 중순경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며, 만족도 설문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장비의 보급시기를 최소한 9월 이내조기 보급 실시('19 년중)
	○ 성과지표 중 규격개선도의 경우 단순히 건수만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 규격개선도의 중요도와 시급성 등 반영 필요	○ 경찰장비 개선·개발 및 규격 제·개정 건수에 대한 성과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 예정('19. 3월)
43	○ 치안 R&D 관련 성과지표를 예산 확보율에서 R&D 성과물을 고려하여 변경 필요	○ 치안R&D 종료 과제의 성과물이 현장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적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반영 예정(연구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19.2월)
	○ 「182경찰민원콜센터 이용자만족도 향상 방안」 수립 필요	○ 「182경찰민원콜센터 이용자만족도 향상 방안」 수립 · 시행 ('18.12월 既 완료) - '18년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6.3점 향상 되었으나, 지속적인 상담품질 개선 방안을 마련 - 상담관 내부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사 신축 추진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상담관 복지에산 편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대내·외 균형잡힌 활동 전개
44	○ 정보화사업 체계적 관리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성과 조직내부 협업이 다소 미흡	○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PMS)' 운영성과 분석 및 정보화 사업진척도 점검 ('19.7월) ○ 정보화사업 부서와 3C 협업회의 개최, 핵심 전략과제 이행 실적 점검 ('19.10월)
	○ 치안데이터 맵 등의 활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 담당자 등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됨	○ 경찰청 데이터기반치안행정활성화 규칙 제정 ('19.8월) ○ '치안 빅데이터 공통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 확보 추진 ('19.10월)
45	○ 범죄예방 및 긴급한 대응을 위해 헬기 이용 비중이 많아지도록 헬기 지원 전력 수립	○ 긴급출동을 위한 야간비행 교육활성화 등 헬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19년 3월)
	○ 무사고 안전비행과 적극적 정비를 위해 연중 정비계획 수립, 헬기 가동률 향상 ○ 항공 업무 정책홍보 노력	○ 연중 정비계획 및 '18년 성과분석을 통한 '19년 헬기 운용 종합대책수립, 항공업무 발전 방안 모색 ○ 실종자 수색,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홍보내용 지방청간 공유로 내부 소통과 대외 이미지 쇄신에 노력(연중)
46	○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 설계에 있어 국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제 설계 필요 ○ 인력 증원·재배치 지표 외생변수 최소화	○ '19년 정책과제 설계에 있어 개선·보안 사항을 반영하여 원점에서 합리적인 성과지표 재설계(3월)
47	○ 적극적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만족도 제고	○ 인사제도 개혁TF 운영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인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연중)
48	○ 정책홍보 및 환류 노력 미흡	○ 지방청별 채용설명회 개최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노력추진(연중)
		○ 방청 대상 성과평가지표와 무도훈련·사격 개선 등 조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중(연중)
49	○ 정보업무 특성상 대국민 홍보에 한계	○ 경찰 조직 내부 공감대 확보 노력 및 타기능·부처 치안정책 홍보 지원 활동도 강화(연중)
	○ 정책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배가	○ 현장체험학습·워크숍 등 일선 정보관 교육 기회 확대('18년 대비 10% 이상, 연중)